

제343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7월11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6.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7.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 دار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8.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0.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11.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1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3.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4.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16.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 21.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
- 22. 소위원회 구성의 건

상정된 안건

- 1. 2015회계연도 결산 4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2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1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용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16
 -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변재일·위성곤·조정식·김정우·이학영·양승조·김현미·윤종오·유성엽·정동영·박남춘·원혜영·정성호·박영선·고용진·유동수·강병원 의원 발의) 16
 - 5.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16
 - 6.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6
 - 7.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6
 - 8.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16
 - 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6
 - 10.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16
 - 11.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16
 - 1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6
 - 13.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6
 - 14.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6
 - 1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남인순·김상희·진선미·도종환·권미혁·윤후덕·이원욱·정춘숙·양승조·박주민·박홍근·유은혜·홍익표·서영교·김경협·인재근·심재권·김두관·오영훈·임종성 의원 발의) 16

16.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윤소하·노회찬·이정미·추혜선·심상정·강훈식·기동민·김경수·김성수·김병관·김해영·김현미·윤종오·이철희·채이배·황희 의원 발의) 17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안규백·박남춘·김성찬·심재권·김병욱·김경협·이철희·인재근·박정·조정식·신창현·이해찬·전해철 의원 발의) 17
1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경협·김민기·진선미·김해영·김종대·변재일·조승래·서영교·도중환·안민석·김관영·유은혜·이개호·손혜원 의원 발의) 17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20.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이정미·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해영·김현미·채이배·김경수·윤종오·기동민·황희·강훈식·김병관·이철희·박용진·김종훈 의원 발의) 17
21.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김경협·윤후덕·양승조·최명길·김영호·임종성·소병훈·김병욱·이찬열·김영춘·백재현·이원욱·유성엽·신동근·박남춘·황주홍·김상희·박찬대·김정우·기동민·김경진·문미옥·김현미·추미애·김종민·안규백·유승희·심재권·박경미·이학영·우원식·윤종오·변재일·조정식·신창현·송기현·박영선·전재수·남인순·김병기·이개호·위성곤·강병원·정성호·김한정·한정애·윤관석·박홍근·이용득·박정·도중환·최인호·전현희·안민석·고용진·노웅래·금태섭·정춘숙·제윤경·이철희·조승래·서형수·권미혁·서영교·전혜숙·김철민·김현권·황희·백혜련·진선미·박재호·김두관·박주민·최도자·송영길·유은혜·정동영·이상민 의원 발의) 17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견례를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앉아서 말씀드리면 되지요?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위원입니다.

지지난주에 회의가 있었는데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 참석 못 해서 오늘 첫 회의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외통위는 싸움도 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그냥 또 머리 아프게 됐네요. 저는 조용한 곳 찾아서 왔는데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재권**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혜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추혜선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외통위 상임위에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외통위의 큰 산 같은 선배 위원님들께 배우면서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초선의 열정 그리고 유일한 여성 위원이 가지는 따뜻함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인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8일 금요일 한미 양국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익 확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정말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사드 배치를 포함하여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거나 야당을 포함하여 국회와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드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 문제와 이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있어 우리의 주도권 확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국회와 함께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유감과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하는 바입니다.

내일이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도 어느덧 9년째에 접어들습니다. 남북관계가 끝 모를 나락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만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에 대한 보상조치마저 아직도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많은 투자 기업인들이 줄도산에 폐가망신은 물론 건강마저 잃어 가고 있습니다. 통일부 등 정부가 금강산 투자자산 전면 매수 등 구제조치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터키, 방글라데시, 이라크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IS 등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무차별적인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 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테러 사건에서는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지만 외교부에서는 관광객 등 해외 체류 우리 국민과 재외공관의 안전 보호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은 없는지 테러 대비 제반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해 주시고 아울러 테러 행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 및 신규 안건 등 오늘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2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대체 토론 하는 순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10시10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외교부 업무실적의 주요 내용들은 불과 보름 전 외통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진 업무보고에서 많은 부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조치와 이에 이은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결정 등 최근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작년도 주요 외교성과 중 현시점에서도 적시성이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실적 및 결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국방위원회에서 주무부장관인 국방부장관이 상세히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외통위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보고 간략히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금번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종합적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북한이 심지어 선제 핵 타격 의지까지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6월 22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주말에도 SLBM을 시험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그간 주변국들과 주요 계기마다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양측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사드체계의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 발표 이후 이 문제는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위권적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중·러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양한 계기에 분명히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금번 조치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강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가안보 문제처럼 엄중한 국익과 관련된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이해와 단합이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워싱턴 시간 지난주 수요일에 발표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제재가 갖는 의미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치는 북한인권 관련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한 최초의 제재조치로서 북한 지도자를 비롯한 다수의 개인 및 단체를 포함시켰는데 2월 미국의 대북제재법 발효, 3월 대북제재행정명령 발표, 6월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등에 이어서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총회 및 유엔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작년에 이어서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데 이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토의되었고, 6월에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된 것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책임성 규명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EU도 금년 초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를 통해 최초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저도 금년 3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 관련 책임성 문제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미측 제재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수 여론은 북한 인권문제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지난 3월 제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됨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 노력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만큼 제20대 국회에서도 그 이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 및 앞으로 우리 외교 추진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주요 사안들을 중심으로 2015년 외교활동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주변국 외교입니다.

2015년은 미·중·일·러와의 양자 관계 차원에서 또한 동북아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인 도전이 제기되었던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정부는 활발한 주변국 외교를 통해서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의 근간을 이루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원자력협정을 42년 만에 개정함으로써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2007년 한미 FTA와 함께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3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원자력협정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원자력 관련 핵심 분야에서 한미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여러 차례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측은 사이버, 우주, 기후 변화 및 글로벌 보건 등 미래 신성장 분야로 양국의 협력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 4월 서명식을 가진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양국 간 글로벌 동맹 차원의 새로운 협력 지평을 구체화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별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어 나가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이후 글로벌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북압박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여 후 있을 미 대선과 관련하여 지난번 외통위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의회와 행정부 내에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을 지금과 같이 가장 굳건한 상태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한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학계·싱크탱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민주·공화 양측 후보진영과 긴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쪽, 한일 관계의 경우 출범 초기 2년간 양국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작년 3월 우리 주도로 한·일·중 외교장관회담이 3년 반 만에 개최되었고, 11월 초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전략적 로드맵에 따른 노력을 통해서 한·일·중 3국 협력 체제 복원과 더불어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양국 관계에 있어 최대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24년 만에 타결되었으며 이에 앞서 수개월간의 어려운 외교 교섭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일본 근대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도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국제문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역사적시, 미래지향의 원칙에 입각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어렵게 마련한 만큼 금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작년에 복원된 한·일·중 3국 협력체제도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북핵 외교입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미·중·일·러와의 주변국 외교와 유엔, EU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자료 10쪽 및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자 및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연중 계속해서 발신되었습니다.

금년 벽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안보에 엄중한 도전이 제기되었을 때 유엔 안보리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수 있었고 이어 결의가 확실히 이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 주요국 차원의 독자 제재 등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할 수 있었던 데에

는 그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 온 국제공조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외교 등을 통해 초당적으로 변함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 14쪽에서 15쪽에는 앞서 미국의 북한 인권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자외교 및 지역협력 외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에서 2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신기후변화협정이라는 지구촌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청사진이 마련된 반면,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의 난민 사태, 에볼라 등 감염병,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우리는 안보, 개발, 인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개 주요 국제회의의 주요 의장직을 수임하였으며 세계물포럼, 세계교육포럼, 개발협력포럼 등 고위급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다자외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면서 우리의 역량에 대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개발협력과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 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금년 5월 최초로 개최된 세계인도주의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진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향후 의원외교를 펼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외교 네트워크 강화 활동으로서, 자료 26쪽에서 32쪽에 걸쳐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유럽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외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브렉시트 투표로 인해서 EU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정

치, 경제, 문화 등 제반 측면에서 영국과의 양자 관계와 한·EU 관계가 공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교부 차관보가 영국을 방문하여 정책협의를 가진 데 이어서 저도 이달 말 유럽지역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브렉시트의 전략적 함의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몽골에서 창설 20주년을 맞는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간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 과정에서 브렉시트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료 33쪽, 경제외교입니다.

작년 말 한중 FTA 발효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이라는 3대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중남미 및 중동 순방, 금년 이란 및 아프리카 정상외교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경제외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브렉시트의 여파로 국제사회가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통합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38쪽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입니다.

금년이 IS 창설 2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극단주의에 의한 테러가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로부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테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해외 여행객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3월 국회에서 채택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총리 주재 제1차 범정부 대테러대책회의가 7월 1일 개최된 바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치 중에 있으며 특히 다음 달 리우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우리 선수단과 여행객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재외동포영사대사가 브라질에 출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1쪽, 공공외교입니다.

여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의 공공

외교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에 다양한 공공외교사업을 펼쳤고 금년 초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외교법을 바탕으로 문화·지식·정책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외교부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은 2조 443억 6600만 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70억 900만 원, 예비비 48억 8800만 원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2조 649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조 42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90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16억 7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병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통일부장관 제안설명해 주실 차례입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강창일 위원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심재권 잠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석 위원 소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예.

○윤영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회와 사실은 충분한 협의 없이 한미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없이 그런 것을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진행 말씀을 하시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한 분의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시면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행을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권**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드 배치가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가하는 타격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제재는 물론이고 군사적·정치적·문화적 모든 부분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압박이 가속될 터인데 이는 전 국민적인 타격이 되고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정말로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 될 부분보다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경제적 타격, 외교적 타격, 문화적 타격 이런 점 등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터인데 이를 위원장님께서 지적 안 한다면, 나는 그걸 지적한다는 그것을 지적하는 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의 중대한 이익이 훼손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는 기본적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사드 문제를 놓고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은커녕 지극히 해악적인 요소로 나타날 터인데 그게 뻔히 보이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외교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지적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간사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오늘 그 내용 가지고 밤새 토론 한번 해 보자고요.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권**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정책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들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내용은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 상황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기억하기로 지난 금요일 11시에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주무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국방위도 사드 배치 과정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방위 중심으로 외교통일, 각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정부 측의 소상한 설명이라든지, 예를 들어 사드의 필요성,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상한 설명도 있기 전에 미리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러의 압박이 있다, 안보에 대해서는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상 규명을 짓는 발언들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밤샘 토론을 해 보고 결론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내더라도? 어떻게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정부 측으로부터 입장도 듣기 전에 어떻게 ‘반대한다’, 그러다가 정부 측에서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우리 국회가.

즉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 송구하지만 말씀 올립니다.

○**원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의 시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그야말로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꼭 하시겠습니까?

○**원혜영 위원** 예.

○**위원장 심재권** 원혜영 위원님.

○**원혜영 위원** 오늘 관련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워낙 사드 배치라는 전격적인 결정이 공표된 직후이기 때문에 논의가 이리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의 문제는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로서는 소관 업무인 바로 외교부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고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외교가 부재한, 실종된 상황이다 이

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그 시점에 주무 장관,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서 옷을 고치거나 옷을 새로 맞추려고 있었던 것이 우리 외교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되기 위해서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뭐 비공개회의를 해. 공개회의로 해야지.

○**위원장 심재권** 잠깐만요, 윤 위원님, 혹시 필요하다면 회의진행 중에 비공개회의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진행 예정사항으로 볼 때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강창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자료 제출……

○**위원장 심재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일 위원** 저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데 우선은 사드 문제, NSC에서 결정했겠지요? 대통령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통일부장관도, 외교부장관도 NSC 멤버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강창일 위원** NSC 결정에 의해서 결정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 내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면 NSC에서 결정할 때의 그 회의 자료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보고하면서 타결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 정부 책임 최초 표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최초 표명이예요? 무라야마 정권 때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최초 표명’, 잘못됐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고노 담화 때는 ‘도의적인 책임’ 이런 식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표문을 보시게 되면 그런 사족 없이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강창일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하고 이번에 한 것 자료를 주세요. 그것 무진장 잘못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이 일본 문제에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자꾸 실수를 많

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그리고 현재 나온 것……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저희가 비교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두 번째는 말이지요. 업무보고에 공개적·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 표명했다는데 이것도 자료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죄 표명했는지.

세 번째, 물어봅시다. 100% 일본 정부예산 출연해서 책임 이행조치 등 위안부 문제 뭐 운운했는데 일본 정부 10억 엔이 사죄금이에요, 위로금이에요? 명확히 대답하세요,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우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것은 바로 기시다 외상이 일본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직접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 또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건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자, 그러면…… 말 한마디 듣고 하세요.

지금 일본에서 이 보도가 나가면 당장 문제 제기할 텐데, 한국 정부는 사죄금으로 보고 있다 이거지요, 위로금이 아니고? 정확히, 성격을 명확히 하세요.

○**위원장 심재권** 강창일 위원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발표문 자체에 사죄와 반성이라고 되어 있고 군의 관여, 책임 통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사죄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지요?

○**위원장 심재권** 잠깐만요, 강창일 위원님.

정책적 사항에 관해서는 이따……

○**강창일 위원** 아니, 자료 제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예스’ ‘노’만 하세요. ‘사죄금으로 한국 정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출연 예산은 정부에서 100% 전액 출자하는 돈이고 바로 지금 말씀드린 책임 부분과 그다음에 사죄, 반성을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시아여성기금과……

○**강창일 위원** 그리고 저는 한국말이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권** 강창일 위원님.

○**강창일 위원** 됐어요, 됐어요.

○**위원장 심재권** 내용은……

○**강창일 위원** 아니요, 한국말이기 때문에 ‘사죄금으로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책임을……

○**위원장 심재권** 장관님, 됐습니다.

정책적인 내용은 이따 정책질의 시간에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제출 요청은 외교부에서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심재권** 꼭 하셔야겠습니까?

의사진행에 관한 것만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양석 위원**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까 윤영석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의 모두발언 또 지난번에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인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이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해박한 외교·통일에 관한 개인 의견과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분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의 그런 소견이 있으시더라도 모두발언이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이게 개별 개인 의견인지 전체 의견인지에 대해서는 발언시간을 나누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이 공정한 회의진행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심재권** 예, 바로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만 다른 의사진행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또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 시작과 함께 또는 마무리하면서 또는 중간에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위원장으로서의…… 우리 위원회 전체의 뜻이 아니라 위원 한 사람으로서의,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모두발언에 드린 말씀도 우리 위원회가 현재 현안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관해서 사드는 단지 일부분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모두발언, 마무리 발언 또는 중간에도 충분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문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제 의사진행발언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홍문종 위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말씀해 주십시오.

○**홍문종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대개 보면 위원장을 다 지내셨고요, 또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모두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위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으로서 개인의 의견을 냈다기보다는 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마치 내신 것 같은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간에 꼭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모두발언이 됐든 아니면 최종발언이 됐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삼가 주시는 것이 위원회 전체를 위해서 저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 위원장들이 그렇게 발언을 안 하거든요. 저도 위원장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심재권**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시야지요,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심재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야

기할 수 있고 또 위원장으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라든가로 비쳐지지 않도록 또 그렇게 전달되지 않도록은 정말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회의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논의하다가 말씀이 중단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4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안건 등을 분담해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소관의 법률안·동의안 및 결의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강화소위원회 등 이상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외교강화소위원회의 경우 그 활동기한은 1년으로 하되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 교류협력소위 등 대체 소위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소위는 김경협 위원장 등 6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윤영석 위원장 등 6인, 청원심사소위는 이태규 위원장 등 6인, 공공외교강화소위는 윤상현 위원장 등 7인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10시46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이번에는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하에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 업무에 대한 분야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정책 분야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북한의 DMZ 지뢰 도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및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통일박람회 2015, 한반도 국제포럼,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국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 부처별 통일준비 과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남북회담 분야는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8·25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동 합의의 후속조치로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제1차 남북당국회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등 총 5회의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산가족 분야는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여 남북 317가족 2099명이 생사를 확인하고 186가족 972명이 상봉하였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간 전면적 생사 확인을 제안하였고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사업 등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교류협력 분야는 광복 70년을 맞아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사회문화 교류사업은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및 전시회,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거래말큰사전 편찬회의, 7대종단·여성단체 방북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인도적 사업은 북한 취약 계층 대상 인도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농축산·산림환경 등 분야별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사업 대상과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세분석 분야는 북한 및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하여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분석을 통해 전략적 북한정세 판단 및 통일·대북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성공단 분야는 지난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제 등 제도개선, 기반시설 개보수·확충, 입주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지원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을 중단하였습니다.

통일교육 분야는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통일 의식 제고를 위하여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초·중·고 50개교를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역 통일교육센터 18개소를 지원하고 오두산 통일전망대 및 2개의 지역 통일관 전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한국 만들기, 통일문화 콘서트 등 참여·체험형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년 간 총 179개 단체에서 3만 822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착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하나센터를 거점 중심으로 개편하여 광역시·도별로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 정규직 공무원 5명 채용, 미래행복통장 본격 시행 등 탈북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간

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3500억 원으로 일반예산 2300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12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인 세계평화회의 개최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9억 9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8600만 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519억 원입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제외한 예산 현액 2319억 원에서 90%인 2082억 원을 집행하고 2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은 탈북민 입국 인원이 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인원보다 감소함에 따라 탈북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에서 불용액이 145억 원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1200억 원 중 77.7%인 93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금 반납액 감소로 21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미수납액 8200만 원을 제외한 20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총 9663억 원을 조성하여 사회문화교류, 인도지원 등 사업비에 554억 원, 경수로사업 등과 관련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837억 원을 사용하고 여유자금으로 7242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일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홍용표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권태오 신임 사무처장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권태오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최근 저희 사무처에서 인사이동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안나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점준 통일정책자문국장입니다.

전난경 위원활동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향후 민주평통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결산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자료 6쪽에 세입결산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건물대여료, 기타재산수입과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총 62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258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9.1%인 256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8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통일정책 자문·통일여론조성 활동에 총 189억 6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제17기 국내외 출범회의, 운영·상임·분과위원회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7개 세사업에 38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청년·여성위원 역량 지원, 자문위원 연수, 통일시대 발간 등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세사업에 36억 1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사무원 인건비 등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3개 세사업에 75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평화통일포럼, 통일시대 시민교실,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해외 포럼 및 강연회 등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을 위한 5개 세사업에 39억 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66억 5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 전용 및 불용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용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대비 0.9%인 총 2억 38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권태오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사업 관련입니다.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홍보사업의 당초 예산액에서 5000만 원을 감액 의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내 홍보를 위한 예산액의 2배가 넘는 1억 6800만 원을 홍보사업에 집행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예산감액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향후 외교부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편성내역을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쪽입니다.

외교부는 아세안문화원 설립예산으로 2015년도에 8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억 9200만 원만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가 대폭 변경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기도 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건축 분야의 전문성이 미흡한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기간과 공사비를 산정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이는바 향후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3년부터 중국 등 사증발급과다 재외공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직 사증심사 보조인력 인건비를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사증수수료 면제조치 등으로 인해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금으로 운영해 온 한시직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사증발급 업무 정체 및 사증심사 부실화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한시직 사증심사 보조인력의 적정 고용 규모를 재산정하는 한편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인건비의 정규예산 편성 등 안정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보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27개 공관에서 에너지보좌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보좌관 채용 공관과 미채용 공관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총상당액 대비 실제 본계약 체결 비율은 에너지보좌관 채용 공관이 미채용 공관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계약체결액 규모의 경우에도 에너지보좌관 채용 공관이 미채용 공관보다 45억 달러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에너지보좌관 채용 공관의 실적이 미채용 공관의 실적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에너지보좌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국회는 지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예산을 26억 원 증액하여 확정된 바 있는데 외교부는 이를 전액 집행하고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보수 현실화 요구를 감안하여 동 사업을 사업성 경비로 편성하였고 예산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교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국회의 증액 의도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외교부는 2015년도에 대규모 환차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의 전략사업비 중 78억 3900만 원을 본부 타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였는데 결산 결과 이용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등 불필요한 이용 건수가 적지 않았고 소모성·행사성 경비에까지 이용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국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ODA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경비 성격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상이한 일반 외교 예산 부족액으로 충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이는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사업의 2015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액 7억 5500만 원 중 4억 2100만 원이 미주한인 풀뿌리대회에 지원되어 특정단체의 사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동포사회의 정치적 네트워크가 매우 미약하고 정치력 신장사업이 2015년도에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선도하는 특정단체에 지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이 됩니다만 사업의 지속성, 확장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외동포재단은 지원 대상 단체를 다각화하여 보다 다양한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외교 강화의 기반이 될 공공외교법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 제12조에 따라 국제교류재단이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역할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예산 규모는 300억 원대의 집행 수준에서 장기간 정체되어 있고 재단사업의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재단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조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외교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통일부 소관으로 위탁사업비 집행관리 문제입니다.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비 중 위탁사업비 예산액은 23억 8800만 원으로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통일염원 70주년 기념사업 등으로 2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위탁사업비 총 28건의 사업 중 24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수의계약의 비중이 과다한 측면이 있고, 동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억 3500만 원에 대해 세부적·구체적인 논의 없이 수용비 및 임차료 등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통일부는 과도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낙찰차액을 사용할 경우에도 집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쪽, 세계평화회의 예비비 사용요건의 미비입니다.

2015년 10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회의는 3개 위탁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였고 총 7억 1600만 원의 예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세계평화회의로 집행된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사용요건, 즉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통일부는 예비비 사용요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정상적 예산 편성·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쪽, 통일준비위원회 사업비의 과다 조정과 목적 외 사용 문제입니다.

통준위는 2015년도에 사업비 27억 2200만 원

중 위원회 회의운영비 등에서 5억 9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통일준비 연구조사비에 3억 3200만 원, 정책홍보비에 2억 63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과다 편성된 회의운영 경비 등의 예산을 일회성 집행업무의 성격인 세미나 경비 및 정책홍보비 등으로 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체계적인 사업계획 미비와 자문기구인 통준위의 업무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물자 사전판정 예산 미편성 사례의 재발방지 필요성입니다.

전략물자 사전판정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가 3000만 원이 세목 조정되어 이중 2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동 예산을 비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위탁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추후 협의과정에서 소요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입장 차이로 이와 같은 세목 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비예산 위탁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주의함이 있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회담 추진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 문제입니다.

남북회담 추진사업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된 2008년부터 남북회담 개최횟수 및 예산 집행 실적이 크게 줄어들고 2015년도는 예산액 14억 9500만 원 대비 31.5%인 4억 71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북한은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남북 간의 접촉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남북회담 추진과 관련된 예산 집행도 당분간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관련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아울러 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회담 재개에 대비

한 준비업무의 강화와 조직의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 남북협력기금 결산으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의 임의 추진의 부적절 문제입니다.

총 150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인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당초 예산계획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국회의 심의·의결 없이 2015년도에 임의로 23억 8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동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통일부는 공사의 본격적인 재개는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당초 2017년 말까지 복원을 마치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서둘렀던 것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이는 당초부터 공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통일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사전에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7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온라인 통일콘텐츠 확대 편성 필요성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북한 문제, 통일준비 과제 등을 접근하기 쉬운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액은 2억 원이나 3000만 원을 전용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1억 496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제작 편수 역시 2014년 67편에서 2015년 37편으로 축소되었는데 자문위원이 2만 명에 이르는 만큼 오프라인 자료의 발간은 예산상 한계가 있고 시의성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료 제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배용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안건에 대한 상정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변재일·위성곤·조정식·김정우·이학영·양승조·김현미·윤종오·유성엽·정동영·박남춘·원혜영·정성호·박영선·고용진·유동수·강병원 의원 발의)
5.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6.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7.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8.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0.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11.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1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3.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4.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남인순·김상희·진선미·도종환·권미혁·윤후덕·이원욱·정춘숙·양승조·박주민·박홍근·유은혜·홍익표·서영교·김경협·인재근·심재권·김두관·오영훈·임종성 의원 발의)

16.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김종대·윤소하·노회찬·이정미·추혜선·심상정·강훈식·기동민·김경수·김성수·김병관·김해영·김현미·윤종오·이철희·채이배·황희 의원 발의)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안규백·박남춘·김성찬·심재권·김병욱·김경협·이철희·인재근·박정·조정식·신창현·이해찬·전해철 의원 발의)

1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경협·김민기·진선미·김해영·김종대·변재일·조승래·서영교·도종환·안민석·김관영·유은혜·이개호·손혜원 의원 발의)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이정미·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해영·김현미·채이배·김경수·윤종오·기동민·황희·강훈식·김병관·이철희·박용진·김종훈 의원 발의)

21.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김경협·윤후덕·양승조·최명길·김영호·임종성·소병훈·김병욱·이찬열·김영춘·백재현·이원욱·유성엽·신동근·박남춘·황주홍·김상희·박찬대·김정우·기동민·김경진·문미옥·김현미·추미애·김종민·안규백·유승희·심재권·박경미·이학영·우원식·윤종오·변재일·조정식·신창현·송기현·박영선·전재수·남인순·김병기·이개호·위성곤·강병원·정성호·김한정·한정애·윤관석·박홍근·이용득·박정·도종환·최인호·전현희·안민석·고용진·노웅래·금태섭·정춘숙·제윤경·이철희·조승래·서형수·권미혁·서영교·전혜숙·김철민·김현권·황희·백혜련·진선미·박재호·김두관·박주민·최도자·송영길·유은혜·정동영·이상민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심재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까지 총 1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10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인도공화국 정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타지키스탄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협정 비준동의안 및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이중과세방지협약(협정) 비준동의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케냐, 브루나이, 타지키스탄, 홍콩 및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정보 교환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인도, 폴란드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통해 기존에 체결한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상황과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양국은 2014년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교환하되 해당 정보는 이듬해 9월 말까지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환된 계좌 관련 정보는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비밀유지 규정을 통해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 협정을 준수하고 이 협정에 따라 양국 간 금융계좌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 연방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상호 교환함으로써 국제 납세의무의 준수를 촉진시키고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 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동 협정들의 체결을 통해 케냐, 카메룬 내 우리 기업의 투자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 고자 합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약당사국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보이익의 보호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의 정책자율성 확보 조치를 인정하고,

셋째,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증대되고 있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등을 고려하여 계약 상대국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가 ISD 제도를 남용할 수 없도록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협정상 혜택의 부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협정들의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케냐, 카메룬 등 신흥시장에서의 투자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병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사유를 감안하시어 이번 상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권 홍용표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먼저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총 14건의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경협 위원 자료 제출 하나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미 국무부 프랭크 로즈 차관보 방문했는데 로즈 차관보의 3박 4일 동안의 한국 일정에서 방문했던 기관과 만났던 인사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권 외교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수석,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14건의 법률안 및 동의안에 대해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의 용어 중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했음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현재도 긴급여권 제도 등 신속한 여권 발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여권 발급에 있어 편의성이 제공되고 있고 신청인의 주소 변경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총 7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상대국 간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여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한 개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양국 간 인력·자본의 이동 및 기술의 이동을 촉진하여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약들의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의 정립, 이중과세의 방지, 분쟁의 상호합의 해결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와 상대국 간의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세조약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고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동 이중과세방지협약들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 경우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이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권 보유 여부 등 협정문의 일부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비해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자동 교환하여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을 제정하여 해외금융기관이 미 국세청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 불이행 시 금융기관의 미국 원천소득 중 3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원천징수 제재 위험이 경감될 것이며 우리나라 국세청이 우리 납세의무자의 미국 내 금융정보를 매년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역외탈세 추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총 2건의 투자보장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에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상대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훨씬 크고 상대국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해 상대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동 협정들의 비준동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김종대 의원이 제안한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의 합의 내용의 부적절 등을 이유로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표현과 내용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합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와 함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우려사항을 고려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배용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총 5건의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용근 전문위원입니다.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2건의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품 등의 반출·반입이 풍선기구의 이동,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살포하는 행위 등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면 타당하다고 보이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생명권 등 기본권들과의 관계, 개정안의 취지와 교류협력법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의 권장을 의무화하고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학통일교육 활성화 추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통일교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통일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타당

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3쪽, 정부 제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개정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동법 조항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를 계속 받게 하려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방북 요청 허가, 북한 당국과의 적극적인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은 한국의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남북경협을 한국경제의 저성장 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문제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등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심재권 배용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지금까지 상정 검토보고 된 총 21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원유철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찬반양론이 매우 뜨겁습니다.

정부에서는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이 어떠한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지난 금요일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대표와 같이 공동으로 동맹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결정은 그동안 정부 내에서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에게서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관점에서, 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국민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위적인 방어조치로 취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 절체절명의 문제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 책임 있는 정부로서 당연히 취할 조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저희 외교부로서는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 나갈 생각입니다.

○원유철 위원 결국 사드 배치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4차 핵실험, 그리고 최근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방어용으로 배치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조치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일각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드 배치의 근본 원인이 지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우리가 방어용으로 배치하는 건데 오히려 방어용으로 배치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드를 배치하라 마라 하는 것보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억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드가 꼭 필요한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왔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나라들도 우리의 안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그런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또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에서 저희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나갈 생각입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발전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 간에 여러 가지 방어조치와 억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지난 수년간 한미 양국 간에 굉장히 다양하고……

○원유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수단의 일환으로 배치한다는 말씀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국방 당국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다층적 방어 체계의 아주 중요한 효과적인 그런 수단으로 효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원유철 위원 궁극적으로는 사드 배치의 원인이 북한의 도발에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당연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아주 엄청하게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중국 측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나서 우리 김장수 대사를 초치해서 일종의 항의성 통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외교적인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계기에 저희한테 전달해 왔던 그런 중국 측의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철 위원 아니, 사드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하루 전에 알려 줬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런데 또 대사를 불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얘기했는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취했던 입장에 비춰볼 때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중국과 러시아에 통보를 우리 외교부에서 했습니까, 사드 배치 결정?

○**외교부장관 윤병세** 구체적인 통보 채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러면 외교부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사드 배치의 결정은……

○**외교부장관 윤병세**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결과만 알려드리는 것이 이런 사안의 민감성에 비춰볼 때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통상 자국의 방위 차원에서 미사일 부대의 배치라든가 군사시설을 구축할 경우에 외교 관례상 주변국들에게 통보해 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관례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이 관례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 문제의 경우에, 물론 저희가 당연히 해당되는 법과 또 한미동맹 간에 협의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해당되는 나라들이 어떤 관점 또는 입장을 표명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 또 주변국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제스처를, 사전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원유철 위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군사시설을 구축할 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수단을, 그런 체계를 구축할 때 우리한테 통보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와 직접 관련된 경우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그런 사전 협의나 통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한테 통보안 하는데 우리는 왜 통보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했다,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국가들의 그

동안의 입장과 관심에 비춰볼 때, 또 그동안 양국 관계에 비춰볼 때 사전에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유철 위원**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위협이 될 만한 그런 무기 체계라든가 부대를, 군사적인 시설을 구축할 경우에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세요.

알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감안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강력히 요청하시라고요.

우리는 해야 되고 우리는 받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하튼 그런 것을……

○**원유철 위원** 똑같은 호혜적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예단하는 것은 아직은 이릅니다. 마는 하여튼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관행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용 목적으로 구축했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중국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니까 중국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군사주권적인 문제는 항상 우리가 자주성을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러한 문제의식하에 저희 정부는 부서에 관계없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원유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원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은 사드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논의가 시작된 이후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사드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통일외교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카드로서야 한다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결정을 보면서 대단히 아쉽다, 결정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다, 정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안타깝습니다. 사드를 군사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사드를 배치할까, 말까 일종의 전략적 카드로 쓰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 등 동북아 이슈 문제에 있어서 협조를 끌어내는 전략적인 카드로 썼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군사적 판단이 전략적 판단을 앞섰다 이런 말씀인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위권적·방어적 조치다, 그 말 맞습니다. 당연히 사드가 들어오면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미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왜 사드가 2013년도부터 이렇게 대두가 되었느냐? 결국은 미 국방부의 아태 전략에서 사드 문제가 태생이 되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드가 주한미군에서 배치를 처음 논할 때가 언제냐? 2013년도부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임스 서먼 장군이 있을 때부터 계속 사드 배치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미 국방부의 아태 전략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 말씀을 드리면 한국하고 미국의 미사일 동맹체제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동맹체제를 한데로 엮어서 중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드라는 게 미국에서 검증된 무기체계입니까? 검증된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지금도 발전하고 진화하는 무기체계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니얼 러셀 같은 미국무부 아태 차관보, 그것 하나의 씨어리(theory)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본토에 4개 포대, 괌에 1개 포대, 가장 먼저 한반도에 배치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피상적으로는 북핵·미사일 위협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만큼 반발하고 있다. 물론 국방부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아태 전략입니다. 한 말씀으로 드리면 미국 MD 체제 편입의 서곡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반발하고 국제 관계에서나 국제회의에서 왜 그렇게 한국에다 이걸 요구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계속 설득해 가지고 ‘야, 그거 레

이더 600km밖에 안 돼, 그리고 이걸 방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 전략에서 방어용·공격용 무기의 구분이 있습니까? 방어용은 반드시 공격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00km 레이다 만약에 전진배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1200km, 심지어 1800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반발하지요. 당연히 반발하지요. 그러면 중국의 이런 반발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통일외교 주도권 확보에 얼마만큼 영향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우리 정부나 아니면 NSC 차원에서 이런 전략적 고민이 있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D체제 편입의 서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저층 방어든 중층 방어든 고층 방어든 하나의 MD 자산을 통합 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그러면 앞으로 있을 미래 예측 가능한, 중국하고 일본의 예를 들어서 군사 대결이 있다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미국이 개입을 한다 그러면 레이다 등 사드 무기체계가 이용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체제가 시작되는 게 결국 통일외교 한반도 주도권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그래서 전략적인 카드로 오히려 미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이 내려지느냐? 저는 한마디로 NSC 차원에서 보면 미국 위주의 사고, 미국 중심의 외교, 그리고 미국과 위주의 의사결정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 국방 중심의 논리관을 치고 한국 중심, 외교 중심, 통일 중심의 논리가 항상 뒷전에 이른다.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 미국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미국 중심의 외교, 항상 우리가 만날 외교의 다변화를 얘기합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장관님께서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공식 회담 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윤상현 위원 몇 년 만에 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작년에도 벌써 서너 번 했고요. 금년에도 이번 만나는 걸 포함해서 세 번이나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세 번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가장 자주 만나는 게……
 ○**윤상현 위원** 미국하고는 얼마나 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도 1년에 대여섯 번 이상씩 만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 횟수 비교하면 어떨까요? 미국하고 훨씬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은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장관들입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도 만났을까 말까 한다면……
 ○**윤상현 위원** 중국에 통보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번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통보하셨습니까, 설득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전에 우리 입장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 말 표현 그대로입니다. 저희 입장,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을 내용과 함께……
 ○**윤상현 위원** 그러면 장관님, 제가 작년부터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설득했어야 되지 우리가 오히려 나서서, 우리 입장에서 물론 설득의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미국이 먼저 설득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래야 중국의 반발을 재울 수가 있다. 미국 측에 부탁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도 지난번 왕이 부장이 3월 달에 워싱턴 방문했을 때를 포함해서 이번 6월 달에 전략경제대화, 7월 초에 전략경제대화가 미·중 간에 있을 때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토의했고요. 다양한 계기에 저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윤상현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득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은 미국대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자위적·방어권적 조치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러 가지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 맞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했고……
 ○**윤상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게 북핵·미사일 위협이니까 북핵·미사일 위협이 제거가 되면 우리가 군사주권적 측면에서도 사드 배치 철수를 요구하겠단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케리 장관이 바로 그런 비

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다면 사드 그런 문제가 왜 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건 뭐 미국, 예를 들어서 케리 장관이 한 거고요. 그러면 장관님께서 중국 측의 앞으로의 대응을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NSC 차원에서 고민이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실제 사실은 이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NSC를 중심으로 해서 주무 부서인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 내의 유관 부서들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최근의 무수단 발사, 또 이번에 SLBM 시험발사를 포함해 가지고……

○**윤상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그건 국방부적인 논리지요. 외교부적인 논리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저희의 경우도 외교적 함의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의 다양한 분석을……

○**윤상현 위원** 외교부의 논리는 달라야 되고 국방부 논리가 아니라 외교 논리, 경제 논리 등등을 포함해서 대응 조치 이런 것까지 생각할 게 아주 많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것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윤상현 위원** 중국이라는 게, 장관님 중국의 외교정책 기분을 아시면, 중국은 항상 중화주의 중심의 외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경올림픽 때 보세요. 서방 강대국 외교 정상들 어떻게 대우합니까?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외교적인 자존심 훼손을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툴을, 대응 조치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전략적 고민을 하고 전략적 대응을 만드느냐? 안하고 있다, 그 정도 급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미국과 위주로 의사결정 구조가 돌아가기 때문에……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윤상현 위원** 중국하고 러시아 전문가들을 키워야 됩니다. 외교부 이 뒤에 있는 분들, 거의 다 미국, 어떻게 보면 워싱턴 스쿨이다, 차이나 스쿨

이다…… 워싱턴 스쿨 대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 또 러시아에 대해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윤상현 위원** 하여튼 이 국방·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일단 정부가 결정을 한 이후에는 국내 정치적 분란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2011년도에 ‘주간조선’에서 ‘21명의 납북자가 평양에 살고 있다’ 그 당시에 최성용 대표를 비롯한 그분들이 210만 명의 평양 시민들 일일이 대조해서 ‘21명의 납북자가 있다, 생존해 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관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 하셨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관련 사실은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2011년인데 지금도 파악하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당시에 파악했던 것들을……

○**윤상현 위원** 아니, 당연히 그 당시에 파악을 하고 송환 요구를 해야지요.

빨리 대책을 만드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사드 도입 관련해서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8일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전인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장관은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2, 3일 사이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을 알게 된 게 8일 시점으로 언제였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 내에 이 문제에 대해

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고 또 외교부장관은 관련 회의에 항상 참여하면서……

○**원혜영 위원** 최종 결정된 것을 안 시점, 8일 날 발표한다는 걸 안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보다 하야튼 제가 참석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관련된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다……

○**원혜영 위원** 8일 날 11시에 발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입니다.

○**원혜영 위원** 그 발표 시점에 장관께서는 이것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외교적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게 언제인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사전에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양한 저희의 생각을 다 정리를 해 냈고, 회의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주말 내내 제가 간부들과 협의도 하고 또 어제 제 나름대로, 금요일 오후에 유관 인사들과의 협의나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발표를 전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외교부도 정부 내 유관 부서의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혜영 위원** 8일 날 11시에 발표하는 시점은 알고 계셨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입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서 그 시점에 외교부에서는 외교부장관이 직접 여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반발해 왔던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전략,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발표를 염두에 두고 수없이 많은 외교부 차원의 대책은 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준비된 계획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을 당당하게 밝혀 나갈 것이고요. 또 일련의 정부 내 협의회에서도 외교부 의견을 아주 잘 설명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발표문도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원혜영 위원** 여튼 8일 날 11시에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상황에서 결국 중국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채널은 외교부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방부에서 했을 리는 없고. 그럼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의 간부들이 그 시점에서 주중대사나 주러대사한테 오늘 지금 이 시점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쪽 반응이 어떤지 또는 곧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나 대응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을 협의하거나 점검하는 과정이 그 11시에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러한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부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외교부의 경우는 이런 사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4시간 체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당되는 공관에서 어떠한 동향이 있을 때마다 즉각즉각 보고가 이루어지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못지않게 얼러티드(alerted) 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방부 발표 내용을 포함해서……

○**원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저간의 언론보도를 보면서 외교부의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었는지, 있었다는 걸 미리 알고 대응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한가했다, 물론 장관께서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발표 전 또는 발표 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외교부가 이러한 결정 과정과 그 뒤 사후 대응 등을 포함해서 너무 소외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방위적 측면에서의 효용성 문제, 비용의 문제, 전자파 유해 문제, 배치적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국민들과 소통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을 완전히 생략한 박근혜정부의 독단적·독선적 결정입니다. 또 그 결정 과정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위선적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가 실종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외교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외교는 존

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또 외교통일위원으로서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드 도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연 외교·전략적 고려란 게 얼마나 비중이 있었는지 이런 걸 검증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사드 도입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회의체가 언제입니까? 언제, 어느 회의에서 결정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NSC가 중요한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NSC가 중심이 되어서 주무 부서인 국방부 또 저희 외교부 또 청와대를 포함한 유관 부서들이 중요한 협의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원혜영 위원** 최종 결정 회의에 외교부장관이 당연히 그 자리에 계셨겠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입니다.

○**원혜영 위원** 중요한 것은 과연 외교부가 사드 도입 결정 전에 사드가 도입될 경우 미치는 외교적 영향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장관께서는 정부의 사드 논의에 참여해서 사드를 도입할 경우에 외교적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겠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요.

○**원혜영 위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회의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원혜영 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외교부에서 사드 도입 시 예상되는 외교적 파장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많은 간부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이러한 저희의 생각과 분석을 NSC 또 유관 부서 회의 과정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그런 점에서는……

○**원혜영 위원** 외교부가 분석해 놓은 사드 도입 시 예상되는 외교적 영향, 그에 따르는 외교적 과제들 또 외교부가 청와대 안보 라인이나 NSC에 관련해서 설명 보고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이 문제의 민감성만큼, NSC를 포함한 유관 부서 회의 과정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혜영 위원** 외교부가 왜 필요합니까? 외교활동이 왜 필요합니까?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드 배치 결정 첫날 시가총액이 3조가 줄었습니다. ‘환구시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88%가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 시 제재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사드 배치 지역과는 교류를 끊고 기업들의 시장 진입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반대 또 그에 따라 예측되는 경제적 피해, 타격에 대해서 예측한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같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NSC를 포함한 정부 내 회의에서 검토가 되어 있고요. 숙지 말씀하신……

○**원혜영 위원** 그러면 우선 중국에 국한해서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예측된 외교 문제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항상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또 국익의 차원에서 결정을 했을 때에는 당에 관계없이 하나의 국내적인 단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가볍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모든 측면을 다 검토한 후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핵과 미사일 위협이 바로 우리 머리를 덮쳐 가지고 당장 이것이 현실화될 때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결정에 대해서 분명하고 당당하게 계속 이것을 밝혀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누리당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좀 추가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ODA 공적개발원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우리가 주지하는 사실이고 또 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도 원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국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도 그러한 국제적인 평판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ODA가 필요합니다. ODA가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한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ODA 규모가 국민총소득 대비해서 한 0.14%, 상당히 신장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제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28개국의 평균이 0.3%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어서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 그걸 증가시켜야 하는데 2020년까지 GNI 대비 0.2%를 하겠다는 그 목표에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당초 지난 정부에서 했던 0.25%는 신정부 출범 후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션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결론이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향조정을 한 후에 조정된 목표를 가지고 저희 정부에서 총리실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리 주재의 회의에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금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확정해 가지고 2020년까지 ODA GNI 비율을 0.2%, 2030년까지 0.3%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우리 지금 경제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 확보된 예산이라도 제대로 집행하고 또한 아주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ODA 사업예산 6300억 중에 일부 한 80억 정도를 제외공관 기본경비로 사용을 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ODA 사업비를 제외공관의 기본경비로 사용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윤영석 위원 그리고 실 집행률이 지금 한 89% 정도 수준 되고 특히 어려운 네팔이나 아프가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 한 8개국의 경우에는 실 집행률이 지금 66.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확보한 예산의 실 집행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ODA 지원체계,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수원국 측의 정세 변화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문제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원국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원국들과 협조를 더 열심히 해서, 특히 재외공관이 조금 더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국별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국제사회에 우리와 비슷한 국력을 가진 또 경제력을 가진 국가에 비해서 지금 ODA 수준이 낮다는 평가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ODA 운영체계라든지 지원체계를 상당히 개선을 해서 이러한 ODA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ODA 질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세계 46개 국제 공여기관 중에 지금 우리 ODA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한국 KOICA의 원조 투명성지수가 46개 국가 중에서 41위로 지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표가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여러 가지 평가기관마다 다양한 평가를 합나다마는 그러한 평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2014년도 ODA 질 평가보고서에도 역시 31개 국가 중에서 행정부담 경감이라든지 또 영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표에서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ODA 규모는 작지만 ODA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분

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알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이 결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또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윤영석 위원 결국은 자위적 조치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이 주요한 자위적 방위 대상이 되겠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우리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군사당국에서 그러한 커버리지를 포함한 군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아마 상세한 설명을 나중에 따로 하게 될 겁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안보를 최대한도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윤영석 위원 당연히 수도권이 집중적인 자위방어의 대상 지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이 약 한 50%에 이르고 있고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총 산출액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또 각종 정치·행정·교육·경제·문화 각 분야의 핵심 기능이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당연히 자위적 방위의 집중적인 대상 지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드 배치 시에 하여튼 그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군사적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또한 한미 동맹을 위한 주한미군 기지도 평택을 중심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수도권과 평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자위를 위한 대상 지역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할 때 그러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이것이 어떤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동안에도 여러 계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저쪽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중국에서도 엑스밴드 레이더가 1800km까지 간다고 하지만 그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고 한반도 영역 내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레이더의 어떤 포착 범위를……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의 레이더는 한반도 영역 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중국이 계속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래에 MD체제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그런 기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저희가, 그러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우려가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한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글로벌 MD의 편입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전략적인 무기체계를 배치하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북한만을 겨냥한 한반도 내에서 운용되는 작전적인 차원의 무기체계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동안 죽 늘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 왔습니다.

○**윤영석 위원** 최근에 한미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이것의 배치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논란이 일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배치 지역 결정에 있어서 이것을 밑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그러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배치 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적합성의 여러 가지 취지나 목적을 잘 설명을 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우리 주무부서가 중심이 돼서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윤영석 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은 국민적인 동의를 밟는 절차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러한 방어, 안보라는 것이 신뢰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할 경우에는 상당한 내부적인 갈등이 더 극대화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결국은 북한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본 위원은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마 사드 배치하겠나…… 그것은 원래부터 정국을 겨냥한 전략적 관점에서 논의되던 것이지 실제로 한국 한반도에다가, 남쪽에다가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서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국익에 지극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손을 굳게 잡고 가야 합니다. 이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익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이 있고 대한민국의 이익이 있습니다. 서로 배치될 때는,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명백히 국익에 반대되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한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 여당의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중국은 지금까지……

○**설훈 위원** 반대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렇지요?

중국이 유엔의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현재까지 협조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우리와 비슷한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유독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사드는 북한 겨냥이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 겨냥이다, 그렇게 돼 있

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다수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급속히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나는 청와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발표를 금요일 날 했는데 그때 장관은 한가롭게 백화점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러셨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설훈 위원 물론 백화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몇 시에 한반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까? 반박 발표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발표한 후 50분 정도 있다가 했습니다.

○설훈 위원 11시 반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11시 50분 정도에 했습니다.

○설훈 위원 아주 이례적으로 바로 반박했어요. 그것을 기대했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못 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입장에서 비춰 볼 때 반응이 있을 거라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있다면 중국이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장관께서는 참으로 한가하게 준비 다 돼 있다고 그러지만, 그 시간에 미안하지만 백화점에 계셨어요.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말씀은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사드 배치에서 외교부는 완전히 배제됐던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때 그 시간에 한가하게 백화점에 가 있었어요? 당연히 외교부에 있으면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몰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만일에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공격 수단을 쓴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중국이 한국에……

○설훈 위원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어떤 경제적 제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제재에 대해서……

○설훈 위원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중국이 앞으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너무 예단해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중국이 취한……

○설훈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 입장에서는 예단 안 한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대할지, 대처를 해야 될 처지니까.

지금 한국의 수출 제1위 국은 중국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1371억 달러입니다. 홍콩까지 합치면 대외 수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몇 %인지 압니까? 미국이 13.3%입니다. 두 배가 훨씬 넘습니다.

경제적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동차, 자동차 지금 중국에 몇 대나 파는지 압니까? 우리가 몇 대를 팔고 있는지 압니까? 잘 모르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계속 말씀하시지요.

○설훈 위원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합쳐 167만 대 팔고 있습니다. 여기 제재 가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3조 2000억이 주식시장에서 날아갔어요, 사드 배치 문제로 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지만 그냥 경제 규제할 수 있다는 그것만 해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3조 2000억이 날아갔습니다.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측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할 거예요.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윤상현 위원, 윤영석 위원이 저런 말씀 안 하시면 어떤 보복을 당할지 아시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잘한다고 잘한다고 그러면 중국이 그냥 있겠어요? 여당 위원들이 당연히 사드 배치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냥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당 위원들이 사드의 문제점 지적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중국이 만일에 한국제품 불매운동 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경제……

○**설훈 위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요. 수출이고 뭐고 다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채권 풀어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에 경제위기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어요. 알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한국경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거의 빈사 직전이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드를 배치해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국민들이 바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위원님께서……

○**설훈 위원** 장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외교부장관이면 최소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말씀을 해야지요. 지금이 안 받아들이면 물러날 때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을 포함해서 사드 배치에 관한 필요성과 당위성 또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아주 면밀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검토를 한 후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설훈 위원** 그렇다면 외교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사드 배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설훈 위원** 그리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사표를 내고 나와야 돼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의 의견에 대해……

○**설훈 위원**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고 그게 국가를 위하는 일이에요. 질질 끌려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 나라가. 지금 물러날 때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겠습니다. 사드는 잘못됐습니다. 적어도 외교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서는 모르겠습니다’라는 적어도 외교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정부 내에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정 부서의 의견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국가의 이익과……

○**설훈 위원** 지금 장관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가의 이익과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설훈 위원** 앞으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설훈 위원** 대한민국 경제가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을 봐야 꼭 그 말씀 하시겠어요? 그게 안 보여요? 그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앞으로 예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설훈 위원** 예단이 아니라 뻔한 내용 아니에요. 중국이 그냥 있었습니까? 사례를 들어볼까요? 가까운 사례로 마늘 파동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두 손 들었지 않느냐 말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마늘 파동과 너무 연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훈 위원** 아니, 그 정도 예측도 못 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

○**외교부장관 윤병세** 외교부로서는 하여튼 가능한 모든 측면에 대해서……

○**설훈 위원** 외교부로서 할 일은요, 외교부 수장으로서 할 일은 지금 이때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자세예요.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자세예요. 예?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설훈 위원** 그렇게 해야 중국도 이해를 하는 뭐가 있고 중국도 ‘대한민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구나’ 그렇게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해 보셨느냐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설훈 위원** 잠깐만요. 장관이 사퇴를……

○**외교부장관 윤병세** 설 위원님.

○**설훈 위원** 할 생각은 해 보셨느냐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토론과정과 고뇌를 통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훈 위원** 오죽하면 여당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야당이라 하시더라도 정부가 내린 결정과 고민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국민보다 앞서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도 한도가 있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 사태는 대단히 엄중해요. 확정된 사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 수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드 배치 잘 안 될 거예요. 전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될 걸 예상하면 책임지고 외교부장관이 물러가는 게 수순일 거라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장관은 또 모르겠어요. 따로 또 국방위에서 따지겠지만 적어도 외교부, 우리 외교위원회 차원에서는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가는 것이 그나마 사태 해결에 작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재권**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오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사드 배치 발표가 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되고 외교부로서는 긴급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발표시점에 장관이 백화점 양복점에 있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배치 발표를 몰라서 그랬었나요, 알면서도 그랬었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교부는 이러한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된 회의에 당연히 제가 참여를 해서 발표하는 문안이라든가 발표 시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또 발표가 난 후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데 대한 시간격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날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주초에 외교부 현관에서 어떤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으면서 바지가 찢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수선해야 되는 짬을 찾고 있다가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일정상 평일도 어렵고 주말도 어렵고 또 이번 주에는 국회가 계속 있고 이어서 제가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상황상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점이 금요일 날 오전, 그 시점이 저로서는 눈에 안 띄게 편하게…… 보통 제가 국무위원이 된 이후에는 하다못해 제가 링거주사를 맞으러 갈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점을 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날도 마침 제가 그 시간이 유일하게 가능했고 또 눈에 띄기 어려운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제 후속조치 시간을 다 알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오해의 소지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했던 그것과 맞지 않습니다. 외교부의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당연히 외교부는 24시간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 주말도 없이 계속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현 위원** 장관이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실은 그게 별로 이해가 안 가요. 적어도 그걸 발표한 시점, 발표하자마자 중국이 우리 대사를 불러들이고 항의하고 그랬지요, 불과 몇 십분 후에? 그런 예민한 상황이 될 것이 뻔한데 그 시간이면 이미 준비하고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야지요, 장관석에. 그래야지 그때 어디를 가다가 바지가 찢어졌다 그래서 백화점에 수선하러 갔다,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궁색한 답변 같은데 그 자리에, 발표 시간에는 적어도 그 이전에 준비해서 장관석에 딱 앉아서 보고받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그 문안까지 제가 다 같이……

○**이석현 위원** 만들어 줬으니까 괜찮다 이건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로서는 제가 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우리 대사 불러서 뭐라고 항의할지도 모르고 뭘 얘기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보고받고 즉각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하려면 장관석에 있어야 맞지,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언제 부른 것도 그 시간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이석현 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장관이……

○**외교부장관 윤병세** 필요한 조치가 다……

○**이석현 위원** 업무 대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필요한 지시가 다 나가 있고 이미 사전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공관과 공관장한테는 정부의 방침을 다 알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현 위원** 기 알려졌으니까 됐다 이런 얘긴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공직기강이 문제라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장관마저 그래 버리니까 정말 이 정부가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건가 다 걱정합니다.

장관이 국민 앞에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십시오, 지금.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이런 발표가 난 시점에 제가 잠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장소에 갔었다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의 행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닫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사과인지 설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국민 앞에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해 나가야지 그걸 갖다가…… 마지막 말은 무게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국익을 챙겨야 된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간 것하고 또 이번에 미국의 사드 배치에 동의한 것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등거리 외교를 한다면 양국 사이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극대화해 가지고 국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것은 서로 전혀 겹치지 않는 부분,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지금 외교

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잘못된 외교라고 하는 비평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나 설명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과거 어느 정부보다 박근혜정부의 경우는 한미동맹을 과거 어느 때보다 튼튼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와의 관계를 함께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지난 3년 반 동안 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중 관계도 과거 어느 때보다 아주 좋은 관계라고 다들, 중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등거리 외교라든가 균형 외교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두 가지 관계를 다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정책은 변함이 없어요. 이번 사드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충분히 저희 입장을 설명해 왔고 또 앞으로도 저희의 생각을 계속 밝혀갈 생각입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사드 배치 다음날인 9일에 북한이 SLBM을 발사했잖아요. 그런데 한·미·일은 이에 대해서 즉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요. 지난 4월 달에 북한이 SLBM을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규탄하는 성명 낼 때 중·러도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다릅니다. 앞으로 중·러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생각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SLBM 발사도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현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유관국가 간에 협의가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도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유엔이 SLBM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외교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요청을 했습니까, 그 사이에?

○**외교부장관 윤병세** 안보리 내 우방국과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험발사한 직후부터……

○**이석현 위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직접 요청은 안 했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당연히 주된 당사국의 하나로서 저희의 요구를 전달했고 이와 관련해서 유관국 간에, 안보리 이사국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우리가 유엔 쪽에 전달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전달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당연히 저희가 유엔대표에게 지시를 하게 되면 유엔대표가 중심이 돼서 유관국들과 협의를 하고 또 그 결과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에 요청한 건 아니지요, 아직은?

○외교부장관 윤병세 보통 이런 문제는 유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안과 관련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석현 위원 어떻든 지금 우리가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통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황강댐, 물난리가 날 때마다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석현 위원 2009년 사고 때, 황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양측이, 남북이 만나 가지고 댐 방류할 때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를 했었지요, 구두로?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지금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최근에 북한이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동안 북한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나 군통신선을 통해서 사전 통보를 해 온 게 맞나요, 과거에?

○통일부장관 홍용표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두 통로가 모두 단절이 된 건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폐쇄된 것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에 북한이 폐쇄를 시켰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북한은 그런 통보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론에 보면 북한의 수공이다, 왜 통보를 우리한테 안 해 오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실은 통보를 하려도 할

수 없게 통로가 다 단절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 스스로 일단 모든 연락처를 단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소위 군사회담을 제안할 때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 통로를 열고 통지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북한이 자기네들이……

○이석현 위원 잠깐만, 시간 때문에, 지금 대화통로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북한에 제의해 가지고 수재 이 문제, 자연재해니까, 이것만을 위해서라도 별도 핫라인을 개설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사실 작년에도 제가 직접 물 관리와 수재 관리를 위한 협의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 측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긴급하게 협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석현 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그렇게 제안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과거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북한 측에서 대답이 없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대책을 펼치고 있고요. 북한이랑 직접 협의하는 문제는 제반여건을 보아가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현 위원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결산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 자칼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칼럼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외교 목표 달성에 어떠한 손익이 있느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했다’는 게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고요. ‘북핵 해결과 통일 목표 달성이 가져다 줄 손익을 면밀하게 따져야 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 계신 두 분 장관님의 역할의 핵심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를 두 분께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나면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해 주십시오.

8일 오전 11시 사드 배치 공식 발표가 됐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추혜선 위원 그날 우리 당 김종대 의원이 직접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면담했습니다. 발표 직전에 면담을 했는데요. 국방부장관님 말씀하시길 ‘7일 날 긴급하게 NSC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날 두 분 장관님 참석하셨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저희가 주요한 NSC 회의는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그날 논의된 내용과 그리고 논의 과정, 결정이 되기까지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직접 장관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 장관님이 결정되기까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날 결정된 회의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약속대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먼저 윤 장관님부터.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 NSC 협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다만 외교장관 입장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될 그런 측면을 포함한 외교부의 분석과 평가 이런 것을 아주 여러 측면에서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혜선 위원 내용은 말씀을 안 해 주실 건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협의 내용은, 원래 NSC 관련된 사항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혜선 위원 그 부분을 모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그랬습시다. NSC 협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추혜선 위원 통일부장관님도 말씀……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NSC 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도 통일부장관으로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북한의 예상 반응이라든지 또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추혜선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반복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약속을 지켜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오늘까지 언론에 보면 한중 경제 손실, 외교 손실 예상들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있지요. 그것은 아시리라고 보는데. ‘외교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신뢰는 하고요.

경제 손실 부분에서 지금 보면 개성공단의 경우에 폐쇄로 입주기업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지지요,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추혜선 위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걸 진행 중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지구 지원법에 남북 당국에 의해서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추혜선 위원 법률 근거가 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했습니다.

○추혜선 위원 과거 FTA 협정 때도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가 수립한 바가 있고

요, 그리고 관련 법률이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보도를 봐도 지금 중국 내에 나가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도 예상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규모에, 우리 반도체의 절반 정도가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경제 손실이 가시화될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직접 이렇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국회 차원에서 법률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정부와 국회가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 과정을 논의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드 문제가 여러 가지로 국가안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일이 다 협의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각종 경제적이다,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전제하시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 단계에서 그런 것을 예단해서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가급적 오랜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내린 것이라는 차원에서 봐 주시고 그리고……

○추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통일부장관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외교부장관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입장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국가 안보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자위적 차원의 조치였고요. 또 피해를 지금 예단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또 그 과정에서 국회랑 잘 협조를 해서 힘을, 국론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다고 하시고 너무 앞서가는 우려라고 하신다면 관련 외교통일 분야의 파장들을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칼럼이 조선일보 오늘 자 칼럼입니다.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 칼럼인데요,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제가 이것을 좀 참고를 삼았는데 이 부분을 하나 제안을 하셨어요.

사드 배치 명분을 강화하려면, 한중 관계 악화를 막으려면 이걸 단서를 하나 달자, ‘북핵 해결 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붙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윤 장관님은 어떠세요? 여기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드 문제 관련해서 각계 많은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미국 내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나 하여튼 이 시점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것을 한번 국내적으로 초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추혜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바꿨는데요, 김도읍 위원님하고.

○위원장 심재권 바꾸셨어요?

○김도읍 위원 먼저 하시지요.

○정양석 위원 고맙습니다.

정양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사드 문제 말씀드릴게요.

지난 7일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인권침해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8일 날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한반도 주변 긴장이 더욱 높아지게 됐고 오늘 북한도 여기에 반발하는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당연히 우리 안보 상황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고려·결정해야 되지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한미 간에 이런 실무협회가 국방부 채널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방부가 주도하지만 외교부는 외교부로서 주변국가에 대해 설명을 한다든지 또 양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습조치가 좀 있었을 걸로, 역할 분담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통상

이런 경우가 되면 발표는 언제 하든지 간에 사드 도입에 따른 전후에 각 부처 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로드맵이 있지 않나요? 사전에 결정된 뒤에 예를 들면 발표 디테이가 언제일지라도 외교부는……

가령 벌써 중국은 입장 표명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외교부가 해야 될 역할 분담이나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외교부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사드 도입과 관련된 주변 국가의 이해나 설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 작년 이전 단계부터 제기가 돼 왔고 그 이후로 주요한 외교 행사 계기에는 대개 중국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 러시아 쪽에서 자신들의 이런 관심을 표명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계기에 저희 정부에서 특히 금년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워킹그룹이, 공동실무단이 구성이 됐고 그 이유와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왔고요.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외교장관회담 계기를 많이 활용해서 저희 입장을 설명했고 또 저 이외에 다른 레벨에서도,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또 다양한 고위실무자 차원에서는 고위실무자 차원에서 상당히 잦은 설명과 또 당위성을 저희가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앞으로……

○정양석 위원 그럴 때 중국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제가 다른 채널로 들어 봤더니 사드의 문제점이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중국 정부가 도대체 설명 자체를 듣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도 제의를 했고 저희도 그러한 군사적·기술적 브리핑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중국 측에서는 자신들 나름대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사드를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작전적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글로벌 MD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들의 전략적인 안정, 전략적인 안보 이익에 저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장관님 그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든가 하는데, 종합하면 과연 우리 정부가 이것을 전후에 치밀하게 역할 분담이라든가 로드맵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느낌에 정말 발표가 좀 빠르다는 그런 느낌도 가졌지만 하여튼 그건 또 정부가 설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예상되는 과장, 예를 들면 대북 제재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거의 의지하고 있는, 의존도가 큰 상황인데 그런 변화라든가 또 아까 오전에도 지적됐지만 한중 간의 경제 마찰로 인한 보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견들을 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이번 결정과 관련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을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논의했다, 또 외교부로서는 당연히 그런 측면을 보고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하여튼 어느 정부 부서이든지 간에 이번 사안을 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바로 그런 측면이 다 공통적인 저희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제는 중국에, 또 정치와 군사는 미국에 깊게 관계를 맺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국가외교 역량이 크게 발휘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문제, 중국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북제재에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대북무역이 제재 이후에 오히려 늘었다, 무역협회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1·2월에 비해서 4·5월이 늘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입장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중국에는 양해도 구하지만 정말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꾸 그렇게 북한을 도와주고 있으니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당당하게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북제재 이후에도 무역이 늘어나는 것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난번 우리 외통위 정규 회의 때도 제가 통계까지 포함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최근 통계를 보시게 되면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나 석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나 과거보다 수입이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중국이나, 중국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실제 그러한 조치들이 이미 다 발표가 됐습니다.

○정양석 위원 장관님,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문화일보 기사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따 나머지 부분 하기로 하고.

통일부장관님, 2월 달에 보도가 돼서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탈북아동 방과후 공부방 문제 보고 받으셨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양석 위원 교장이 아이들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 먹이고 폭언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태조사는 복지부 소관인가요, 아니면 통일부가 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된 방과후 공부방인데 그러니까 인가가 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사실은 자원봉사 비슷하게 탈북자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설이고 그래서…… 다만 이것이 탈북민 관련 단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재단을 통해서 했고요.

○정양석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래서 같이 지금 실태조사를 한번 다 점검을 했고요.

○정양석 위원 장관님, 지금 남한에 넘어온, 한국에 넘어온 한 3만 명가량의 탈북자 이분들 정말 소중하게 모시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통일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양석 위원 저희들이 그래서 탈북아동 교육기관 실태를 봤더니 미인가 교육기관 대안학교 6개, 방과후 공부방 22개, 28개에 650명 정도가 여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재단에 교육개

발부 직원 한 명이 이것 전체를 커버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실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중국이나 제3국에서 탈북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모셔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 방안을 마련하셔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래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몇 군데 직접 가서 보고 점검도 하고 학생들도 격려하고 했었는데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는 방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현황을 완전히 점검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외교부장관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약이라고 하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이 되고 국제법 질서 안에서 규율이 되는 국제적 합의를 일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 중요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번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체결이 된 것이 아니고 언론 공동발표문을 통해 가지고 한미 양국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엄밀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미 간의 방위조약에 따르는, 지난번에 있었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또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었는데 이것도 이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언론 공동보도문 형태를 취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드는 기본적으로 요격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한미군 무기체계 배치는 이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죽 되어 왔고요,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으로 보고요.

특히 헌법에 있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과 관련해서 이번 사드건은 우선 조약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마는 또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국회의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한미 공동발표문을 보게 되면 사드의 운용 그리고 설치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부담을 하지만 부대가 주둔하게 되는 사드 배치 에어리어(area), 부대는, 땅은, 토지는 한국 정부가 공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기반시설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 사드 부대가 설치가 돼 가지고 운용이 되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의 땅 몇 평 정도, 몇 km 정도 필요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구체적인……

○박주선 위원 그것을 알아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크게 부담이 되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이 있느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군사기술적인 사안은 지금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는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께서 아마 오늘이나 아니면 또 주회에 부지 문제를 설명하실 때 함께 설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박주선 위원 그러면 장관님 말씀은 지금 얼마 규모의 땅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큰 틀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한미군사 당국 간에 주한미군의 전력 통보라든가 또 협의절차라고 하는 절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민감한 반응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 또는 군사적인 측면, 경제·무역 등등 관련해서 어떠한 구체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걸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초기 단계에서 중국 정부나 러시아 정부가 밝힌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유관부서, 외교 부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성명의로 나온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동안에 통보 전에 또는 통보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국가들과 만났을 때 그때 전달한 입장들입니다. 그러나 그 입장들은 이미 그동안에 잘 알려졌던 입장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핵심은 하여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전략적인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글로벌 MD 차원에서 본다는 시각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일부 언론에서는 불이익과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어제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한 대응책을,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고 인민일보 자매지라고 하는 환구시보에서는 정치·경제·문화·관광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금 중국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또는 관광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어떤 방법의 구체적인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계속 그런 말씀은……

○박주선 위원 앞으로 어떤 정도의 강도를 가진 보복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불이익과 관련된 앞으로의 상황 이런 것을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아직……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한 측면도 있고 또 그 나라 측면에서도, 더 큰 측면에서는 한중 관계나 한러 관계 이런 것을 대국적인 측면에서 보려는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 단계에서는 하여튼 우리가 너무 앞질러서 이런 것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렵게 내린 결정을 국내적으로

로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또 우리가 노력을 하느냐 하는 그런 보다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중국 ‘환구시보’ 등등의 보도 내용은 오폭에 불과하고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분야에도 보복을 하는 조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해당되는 나라의 여러 여론 주도층들 중에 강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보다 더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각각의 여론에 대해서 일회일비 하기보다는……

○박주선 위원 장관님, 여기에서 ‘어찌 보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이 이리이러한 강경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답변한다면 오히려 중국 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반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이 이리이러한 단계적인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전략적 대응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당국자로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어떠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해당되는 나라에서 그런 것을 얘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여러 측면을 다 면밀히 검토하고……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발 정부 내에서 중국 정부의 어떤 조치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 가지고 만반의 대비책을 갖추어서 우리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부담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박주선 위원 한 가지 마저 묻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핵무장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핵무기 개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저희 안보 당국에서 또는 저희 우방국들 차원에서……

○박주선 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핵무기 능력이 지극히 고도화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 또 미사일 능력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주선 위원 아니, 그렇다면 핵무기가 개발되지 않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외통위 있을 때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다면 사드를 배치한다는 명분과 논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이런 금번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또 이번의 SLBM 시험발사 또 금년 1월 초의 핵실험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아주 최고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로서는 아주 중시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비단, 이 위협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선 위원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역할이 굉장히 큰데 사드와 관련된 중국의 반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매우 됩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외교를 통한 압박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역할이 쇠퇴가 되거나 또는 약화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그런 측면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가 많으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하면서 북핵 문제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 문제는 그동안에 안보리의 모든 국가들이, 그것은 단순히 해당되는 나라의 안보를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로 다 간주를 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또 위원회 멤버로서 앞으로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도록 저희로서는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위원장 심재권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사드 문제가 오늘 질의의 거의 주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사드는 아까 앞서서 윤상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미국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특히 동북아 전략의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일본과 함께 한국을 어떻게 포함시켜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할 것인가가 미국 국방부의 핵심적인 전략이었고 이 와중에서 사드 배치 문제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이 핵무기를 이유로 한 사드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 북한 핵무기, 미사일 문제를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전략이나 그다음에 중국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미 다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에 와 가지고 갑자기 북한의 핵무기 때문이고 미사일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게 국제사회에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체제로써의 사드를 얘기했는데 북한의 무기체계상 가장 위험한 게 어떤 것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장사정포가 있고 단거리 미사일이 있고 고고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우리 한반도, 특히 남한 지역에는 특히 장사정포의 위협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고고도 미사일은,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형태의 미사일 형태를 요격하는 시스템이 사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남한 지역에는 효용성이 거의 별로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현재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의 무기체계 중에서 장사정포이고 단거리 미사일인데 별로 한반도에 유용하지 않을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 우선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인해서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문제도 다 문제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외교적인 문제.

그래서 오늘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의 SLBM 1차 실험, 지난 4월 23일이었지요. 1차 실험 때는 바로 그다음 날 유엔 안보리가 긴급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때는 중국과 러시아도 바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경협 위원 이것을 두고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이 주말임에도 신속하게 경고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엇그저께, 7월 9일 날 북한이 2차 SLBM 발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입장 발표도 없고 유엔 안보리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안보리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왜 저번 1차 실험 때는 중국·러시아가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 성명에 동의를 했다가 이번에는 잠자코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중국의 입장, 그다음에 최근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몇 가지 계속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대응 조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선 군사적인 조치로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미사일 추가 배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극동 지역으로 미사일 전진 배치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사드 배치를 결정한 순간에 중국의 미사일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 배치 미사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조짐이

이미 논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실제로 남한 지역에는 큰 효용성도 많이 떨어지는 요격시스템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중국 미사일의 타깃이, 대상이 되고 러시아 미사일의 타깃이 지금 현재 한반도 내 사드 기지를 향해서 준비되고 있는 흐름들이 벌써 느껴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한미 공동실무단이 발족한 이후에 전문가들 차원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분야도 이것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나 국방부장관께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김경협 위원 아니, 군사적인 효용성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러시아나 중국의 미사일 전진 배치, 사드 배치에 대항하는 미사일 전진 배치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래서 일단 북한에 대해서도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전진 배치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일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각 해당되는 나라의 그런 여론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마치 실현될 거라는 식으로……

○김경협 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실현될 것이다, 안 될 것이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사일을 그렇게 전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실행했을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상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이……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몇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실제로 가상을 해 놓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벌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당 정부 내에서 협의를 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결국은 지금 장관님 답변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핵 문제 때문에 대북제재안에 대해서 결의안에 찬성하고 대북제재에 동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드 문제로 우리가 한미와 중국과 러시아가 갈등을 하는 양상이 벌어지면 결국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함께 국제사회의 공조를 취해 왔던 모습에 변화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핵 공조 전선에 이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있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김경협 위원 아직까지 역할을 해 온 건 맞는데요. 사드 배치 이후에 입장의 변화가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핵 문제에 대한 대북제재의 그동안의 국제 공조체제가 지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가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시 주석을 포함해서 중국의 경우 여러 레벨에서 그동안에 북핵 문제는 절대 불용이다 또 비핵화를 달성해야 된다, 전면적이고 안전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단호한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마당에 안보리 2270호 결의에 대한 이행을 느슨하게 한다든가 지키지 않는다든가 꼭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협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갖고 계신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 내에서 토론 과정으로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부서가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식으로 규정짓는 것은 그렇고요. 모든 측면을 감안하면서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태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드 배치가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으면 사드 배치를 나중에라도 다시 철회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까도 제가 다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기본적으로 사드……

○이태규 위원 아니, 이것이 조건부적인 제한적인 배치인지, 아니면 영구 배치인지,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결국은 미국 중심의 MD체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조금 더 분명하다면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우려를 많이 희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인 배치인지, 아니면 영구 배치인지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여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이태규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시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것을 주무 장관……

○이태규 위원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주무 장관께서 보다 더 상세히 아마 지금 국방위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태규 위원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부장관이 더 적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국방부장관한테 답변 책임을 미루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정부의 판단이나 결정 과정, 배경에 나름대로 많은 고심

과 결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그동안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과정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전격적으로, 일방적으로 야당이나 국회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거의 군사 작전하듯이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향후 국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단순히 군사·안보적인 차원의 접근법만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인가, 적어도 군사·안보적인 유용성과 정치·경제·사회적인 비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국민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지금 전부 무시되고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당연히 저는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대국민특별담화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의 정책실장이 나와서 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를 신뢰하고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아까 외교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향후 파장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사드 배치가 국민투표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 한·미·일 군사동맹 또 북·중·러 군사동맹, 이러한 냉전체제로의 복귀 가능성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게 보려는 시각이 최

근 언론에 일부 보도되어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중국과 러시아 모두 최근 들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것이 안보리 결의 채택과 이행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북한을 그런 측면에서 옹호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냉전체제의 회귀 가능성은 없다 지금 외교부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로서는 북핵 문제와 이 문제를 직결시켜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규 위원** 이번 사드로 인해서 결국 동북아시아 정세가 긴장이 더 고조되고 이를 빌미로 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이런 개연성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빌미로 해서 일본이 최근에 평화헌법 개정 문제의 흐름과 더불어서 군비 확장의 명분으로 삼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외교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북한의 군비 증강이라든가 핵·미사일 위협이 해당되는 나라별로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나라의 경우에 그동안에 민감하게 대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셨지만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해서 유엔의 대북 결의안 2270호, 여기에 따른 국제공조 체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탈하거나 또는 비협조, 사보타지(sabotage)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까지 그런 내색을 시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존의 원칙적이고 전면적인 이행 입장을 그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쭙면 북한이 또다시 SLBM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4월 23일 날 북한이 SLBM을 발사했을 때는 신속하게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규탄 성명 채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원칙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당사국들이라면 지난번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다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연되곤 합니다마는 좀 더 지켜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태규 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규탄 성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번 사드 배치 발표 과정에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7월 2일 날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방한을 했습니다. 로즈 차관보의 이번 사드 배치 발표 과정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로즈 차관보는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은 아닙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분은 한국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분이 관련되는 업무 관련해서 한국 내 여러 카운터파트들을 만나고 특히 한반도 정세 이런 데 대해서도 물론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왔습니다.

○**이태규 위원** 청와대를 방문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또 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가진 게 주된 목적이구요. 국방정책실장 이외에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 24일 날 미 국무부의 홈페이지에 ‘로즈는 한국 외교부 및 청와대 고위 관료들을 만날 예정’ 그 다음에 ‘다양한 전략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한국 방문한다’ 이렇게 공개를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결국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결정했을 개연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사안에 관한 엄중한 성

격에 비추어서 차관보가 방한해 가지고 이 문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리고 아까 장관님 업무보고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 김태현 설립준비위원장이 이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위안부 할머니 피해 재단이 출범한다’ 이렇게 언론에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타결한 부분은 적어도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적인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재단을 임의로 정부가 출범시킨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설립을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다시 한번 모아보기를 제가 촉구합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한테 10억 엔을 받고 재단을 설립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국가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요. 차라리 국민들한테 설득한다면 그 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억 엔, 100억 엔을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모아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외교부, 심지어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추가적인 것은 이따 추가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외교부장관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드 배치 발표 그 시각 전후로 장관님께서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공인으로서 상당히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중요

한 시점에 오해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걸 국방부장관께 여쭙 봐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국방부장관을 이 회의장에 오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사드가 꼭 필요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금년 초 저희가 안보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무수단 발사, SLBM 발사에 이르는 수십 개 이상의 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지난 20년 동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특히 군으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층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특히 사드가 단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아주 효용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것이 결코 제3국, 주변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동안 여러 계기에 설명을 해 왔습니다.

○김도읍 위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사드 이외에는 방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북한이 소위 여러 가지 핵과 미사일 위협 수단을 다중화하고 있습니다. 다중화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킬체인과 KAMD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0년대 초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사드처럼 이러한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방어체계가 다층적 방어시스템상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중국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장관님께서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를 크게 대별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 발언의 기본 취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사드의 작전적 측면에, 한반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 이상으로 전략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글로벌 MD에 편입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번 우리가 브리핑까지 할 정도로, 해 줄 수 있겠다는 정도로 중·러 양국에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드의 앞 글자인 ‘T’가 터미널(Terminal)을 뜻하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전술적으로 이게 종말단계라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고도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내려오는 터미널이 한반도, 대한민국 영역일 때 이것을 발사해서 요격을 하는 방식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일단 사거리가 긴 사드가 먼저 1차 방어를 해 주고 다시 또 하층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층방어시스템인 PAC-3가, 팩이 지원해 주는 그런 다층방어가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나치게 들여다보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아까 야당의 모 위원께서 7월 9일자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를 인용했더라고요. 저도 이 환구시보를 두어 번 읽어 봤는데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알아들었는데 그 외의 이야기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이것 장관님 보셨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다 봤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중국 본인들이 북한 핵을 억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만 탓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중국은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도대체 중국이 사드를 보는 입장이 반대를 하기는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 전략적 측면에서……

내일 PCA에서 재판 판결이 있지요? 있을 예

정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필리핀과 중국과의 중재재판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김도읍 위원** 이게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해계모니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이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체소가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재재판의 경우는 그중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분쟁을 이번에 최초로 중재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이렇게 한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이제 경제는 전 세계가 글로벌화 돼 있는 것 같고요. 정치·외교·군사 측면에서 볼 때 북·중·러 그다음에 한·미·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냉전시대에 그러한 남북 삼각구도와 북방 삼각구도가 대치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냉전 종식 후에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런 형태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현재 지금 상황이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예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반대는 중국과 러시아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식적으로 과거와 같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구도로 연계시키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르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바라는 바도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핵개발을 지금 단계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중국의 역할, 어떻습니까? 장관님이 보시기에 중국이 북한 핵 억지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중국이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야튼 최근에 4차 핵실험 이후에 보여 줬던 태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한 측면을 앞으로도 계속 견지하도록 독려할 생각입니

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께서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대중국, 대러시아 설득 작업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중국이 북핵 억지를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쭙았던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국의 역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대 중국 수출량이 1300억 불 정도 되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도 거의 1000억 불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쌍방 교역량 편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한중 FTA가 체결돼 있지요? 이걸 국제적인 약속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도읍 위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중국의 경제 전문가든 한국의 경제 전문가든 보면 ‘중국이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외교부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챙겨봐야 될 부분인데 통상 관련해서는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했다, 노력한다, 말씀들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 회의를 할 때 뭘 했냐 이런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장관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이 시점까지의 외교부의 노력, 과연 대중국, 대러시아 관련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국민들을 상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이번 결정은 여러 가지 모든 측면을 아주 면밀하게 또 심층적으로 저희가 토의, 검토를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을 제기했고요. 또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할 생각입니다.

○**김도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홍문종 위원** 홍문종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선 통일부장관님께 한번 여쭙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드 배치를 함으로 해서 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잃는 건 뭘고 얻는 건 뭘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사드 배치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고조되고 거둬지는 북한의 위협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문종 위원** 잃는 건 없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이 반발을 하는데 그것이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크게 잃는 것은 별로 없고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문종 위원**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더 강력한 경고를 하게 된다 이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 입장은 외교부 입장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드에 대해서 국민적인 정서는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통일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외교하고 관계없이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북한에서는 핵까지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말하자면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드 하나 배치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강력한 입장 같은 걸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개성공단까지 문 닫고 있는 마당에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사드 배치하는 문제가 뭐 이렇게 큰 문제냐, 통일부로서는 이런 강력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은 발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방부가 앞서서 얘기를 하고요.

○**홍문종 위원**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에서 강력하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통일부에서도 입장을 발표하

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외교부장관님,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시기가 맞는 시기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에 무수단 발사와 연이은 SLBM 발사 그다음에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저희가……

○**홍문종 위원** 맞는 시기다 이 말씀이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 지금 성능에 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 사실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성능에 관해서는 확인된 뭐가 있습니까? 외무부는 그런 것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에 사드는 미국 내에서도……

○**홍문종 위원** 확인이 돼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십여 차례에 걸친 테스트를 통해서 성능이……

○**홍문종 위원** 그런데 왜 계속해서 성능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매스컴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마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이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사드 배치가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저희 국군 당국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공동실무단을 통해서 쪽 검토해 본 바로는 군사적인 효용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홍문종 위원** 지금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말하자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외에 또, 물론 경제부처들도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이 세 부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관계대책회의나 이것에 관해서 외교부에서 뭐 하고 통일부에서 뭐 하고 국방부에서 뭐 하고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NSC가 중심이 돼서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협업하면서 이러한 긴밀한 협의가 계속될 겁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정보 공유도 하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 또 대책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교부는 뭐 하고 통일부는 뭐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셔도 우리 국민들이 믿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런데 아까도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중국도 지금 걸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왕이가 얘기하는 거라든가 ‘환구시보’에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외에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동안에 나왔던 반응들은 아직까지는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비교적 절제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앞으로……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중국이 혹시, 우리는 말하자면 아까 ‘터미널’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바깥으로 표시하는 여러 가지 표시들이 북한을 의식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미국을 의식해서 그러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중국과 우리가 경제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걸 잘 알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외교부장관 윤병세** 중국의 가장 커다란 우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미국의 대중국 고립화 또는 압박정책에 한국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군사적인 수단의 중요한 일부인 사드체계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글로벌 MD에 편입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는 저희가 ‘이번의 사드체계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여간 사드 때문에 결국은 손해를 봐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관

해서 대중국하고 관계 또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은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관방부장관이 이번에 사드 발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홍문종 위원** 하여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하고 달리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청소년들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건 학교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통일부에서 '앞으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한 건 없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저희가 관련 교육지침서를 만들어서 하고 또 관련 자료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대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통일교육사업을……

○**홍문종 위원** 저는 통일이 굉장히 임박했다, 또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일종의 컴펄서리(compulsory)로 말이지요. 꼭 통일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학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니면 패스 앤 페일(pass & fail)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통일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랑도 협조를 해서……

○**홍문종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50개교를 통일교육연구학교로 만든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수천 개 학교가 있는데 50개 학교밖에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장관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지금 18개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오는 거지 무조건 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역통일반도 2개 만들어서 전시 환경을 개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통일교육관도 꼭, 저 대한민국 끝에 있는 학교면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꼭 거기 들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통일교육센터는 각 센터별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부하고 공조를 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교육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 교육부랑도 많이 협조를 하고 통일부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또 국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앞으로 통일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잖아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71주년입니다.

○**홍문종 위원** 70주년 기념행사를 올해……

○**통일부장관 홍용표**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71주년입니다.

○**홍문종 위원** 올해는 71주년 기념행사. 이제 70년도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소년 세대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생각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 전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든지 잘 모른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그 슬픈 역사에 관해서 또 북한과의 나쁜 역사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통일교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외교는 국가이익이 최우선이지요, 국익이 최우선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강창일 위원 외교에서 국익이 최우선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명분이라든지 의리는 구실에 지나지 않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국익이라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사드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북핵 실험보다도 더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불안과 충격, 우려, 아주 심각한 것 알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강창일 위원 제가 2년 전부터 말이지요,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 실패했다, 실패할 것이다, 외화내빈(外華內貧), 속 빈 강정, 그래서 ‘깡통외교’라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어요. 요즘 위안부 문제 얼렁뚱땅 해 가지고 풀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외교적 언어 구사 때문에 답변을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위로금인지 사죄금인지 그것 명확히 답변할 수 있어야지 뭐 그걸 우물우물해서 지나갑니까, 아까 오전에 얘기할 때 말이지요. 일본 정부는 위로금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는 위로…… 앞의 전체 내용이 사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죄금이라고 단정하고 있느냐? 대답을 안 해요. 우물우물우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신껏 해야지요. 위로금이면 위로금, 사죄금이면 사죄금이라고 해야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그것은 제가 수없이 발표한 내용에……

○강창일 위원 수없이 발표했는데 전혀 지금 뜻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뜻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걸 위로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가끔 가다 사죄금처럼 얘기하니깐 일본 정부에서 당장 사죄금이 아니다, 위로금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 정부가 책임을 표명하고 사죄와 반성하는 토대 위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한 돈을 일괄로 지불해서 상처를……

○강창일 위원 정부 출연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의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상처를……

○강창일 위원 자꾸 말장난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지금 여러 번 말장난……

○외교부장관 윤병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단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를 해 봐요. 그 얘기는 못 하면서 왜 그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그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강창일 위원 그러면 ‘예스’ ‘노’만 하세요. ‘사죄금이지요?’ 하면 ‘예’ 그렇게만 답변해 보시라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정부 예산에 의해서 하는 조치라는 것이……

○강창일 위원 말장난 자꾸 하지 마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강창일 위원 아, 말장난하지 마시라고요. 어디 국회에서 말장난을 그렇게 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일 간의 외교 문제가 될까 봐서 사죄금이나 얘기 못 하고 앞에 뭐 ‘반성이다, 사과했기 때문에……’ 우물우물해서 우물우물 지나가. 됐어요, 지금 충분히 입장을 알고 있겠어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것을 강조해 주지요.

남북 문제도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이것은 북한의 북핵 문제하고 미사일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단 하나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한중 관계 아주 최상의 관계를 유지했지요. 여기서 나는 외교수장인 윤병세 장관의 큰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박수를 늘 쳐 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못 갈 것이다, 그것도 미리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터져 버렸잖아요, 예? 지금 한중 관계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교수장인 윤병세 장관이 들어와서 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8일 날, 저 세 가지로 봅니다. 모르고서

백화점에 옷 사러 갔다고 하면 그게…… 10시부터 11시 반까지인데 옷 사러 갔다고 하면, 모르고서 했다면 완전히 대한민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하나.

두 번째, 알고서 갔다고 그러면 한심한 행동이다.

세 번째는 뭐가 하나 있는고 하니까 무언의 데먼스트레이션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속으로는 지금 반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정부가 정했으니까 쫓아가는, 그래서 무언의 항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봐요.

지금도 계속 들어 보면 말이지요, 죽 얘기 들었는데 ‘사드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충분히 논의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금…… 아마 장관 그만둔 다음에 회고록 쓸 때 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아마 답변도 못 하겠지요. 속으로는 반대하는 것 같아, 한중 관계 생각해서.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됐고, 박근혜 외교정책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덕적인 문제, 근무태도에 대해서, 그것도 업무시간에 가서. 그것 구차합니다, 외교부에서 내놓은 답변이. 뭐 시간, 지나가다 남아서 어찌고 저찌고하고…… 그것 그렇게 궁색하게 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딱 정직하게 사과하는 게 옳지요.

그래서 윤병세 장관의 명예를 위해서 사표 내세요, 사표. 이름 석 자는 잘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최장 외교수장이면서요. 왜냐?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깡통외교로 끝났기 때문에 사표 내는 게 극히 정상적인 자세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업무보고에도 지난번에, 2주 전에 거의 3년 반에 걸친 박근혜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그런 외교안보적인 도전에 당면하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주변국과의 관계라든가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이라든가 글로벌한 외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이번에 사드도 아주 엄중한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에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내린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국내에서 단합을 하고 또 무게를 실어 주시면 이런 도전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강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특히 제일 잘 아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어려운 외교를 풀어 나가는 데 보다 더욱더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저기 말이지요, 빨리 사퇴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끝내 쥐야 될 텐데, 지금 중국과 튼튼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중국이랑은……

○강창일 위원 중국 날아가서 한번 중국 체대로 설득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과제로 한번 두고 봅시다. 과연 중국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 지금까지 그 최상의 관계 유지하면서 많은 인맥 갖고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도 있고.

기대해도 됩니까? 해도 되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저희가 아무튼 주변국……

○강창일 위원 한 달 이내로 결과들이 다 나올 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주변국들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취한 결정에 대해서 당당하게, 분명하게 해서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강창일 위원 그다음에 말이지요, 이 사드 배치 문제의 절차, 과정, 결론도 다 잘못됐어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 문제로 직결된 문제를 밀실에서 이렇게 후다닥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작년에 말이지요, 예결위원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장 본회의 질의하면서 그때 미국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방부장관한테 질의했어요. 협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대. 계속 거짓말. 미국 정부에서도 협의하고 있다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대. 며칠 전에도 국회에서 질의했잖아요. 어떤 분이 질의해서 ‘지금 사드 문제 얘기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 놓고 그냥 8일 날 전격적으로 발표했어요.

이게 밀실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후다닥 몇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국회 와서 그냥 계속 거짓말만 했어, 작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미국 정부,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는 협의하고 있다는데 계속 아니다 아니다 아

니다……

이거야말로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정책을 뽑니까?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절차도 과정도 결론도 다 잘못됐다.

어디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회가 바보입니까? 당장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는 사람, 전경련 까지도 반대한 사항 아닙니까, 전경련? 전경련이 늘 보수적인 집단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왜, 미국의 압력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예요, 도대체가. 철학이 있습니까? 참 갑갑합니다, 갑갑해.

그래서 장관님께 단 하나, 최대한 중국 설득시켜 보시고 그리고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위원** 통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국제공조에 의한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중단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제 방에서 개성공단기업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개성공단 피해업체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홍용표 장관께서도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은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 총 261개 기업 중에 6개 업체만이 31억 원의 지원금을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261개 기업이 9446억 원의 피해금액을 신고했고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액은 7779억 원입니다. 신고 금액과 정부 확인금액의 수준은, 정부의 확인한 금액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금액 7779억 원 중에 65%, 또 입주업체들이

제시한 피해신고 금액에 비해서는 53%에 지나지 않는 5079억 원만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왜 정부에서 확인 금액의 65%만 보상 지원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저도 위원님이 대표로 계실 때 위원님 방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질적으로 수많은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비대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설명을 드리면 우선 비대위에서 수용불가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각 기업들이 알아서 돈을 받으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6개 업체가 이미 수령을 했고 더 많은 업체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7700여억 원의 지원 부분은 우선 투자자산의 경험보험에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따라서 피해의 90%, 최대 70억까지 지원한다는 그 기원에 따라 지원을 했고, 사실은 경험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지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한테도 90%의 반 수준인 45%를 지원했고 또 70억을 넘어가는 액수에 대해서도 일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였고, 그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교역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들이 교역보험을 가입을 안 했지만 그 교역보험이 바로 그런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준비해 뒀던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역보험의 기준에 근거해서 70%까지, 그리고 최대 금액은 원래 10억이었습니다만 그동안 기업의 자산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22억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장관의 주장은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과 실제 지원 확정된 금액이 2700억 원 차액이 있는데 통일부는 ‘보험가입 여부와 지원 기준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런데, 국가정책에 의해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확인한 피해

금액마저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각 분야에 많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투자한 업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갑작스러운 결정 때문에 오는 피해를 제대로 다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해야 될 그런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원 기준도 현재 기준으로 피해 지원을 하면 결과적으로 기업별 지원율이 최저 26.2%에서 최대 112.9%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게다가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보상을 덜 받게 되는 그러한 모순이 현재 발생돼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를 전혀 없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 사전협의를 다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비대위에서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비대위에서 주장한 것과 실상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무성 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저에게 와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사전협의를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장관 말……

○**통일부장관 홍용표** 계속 협의를 했고요,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도 서류 미비한 점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것 저희가 연장까지, 기한 연장해서 받아줄 건 다 받아주고 확인할 건 다 확인을 했고요. 본인들이 신고를 사전에 하지 않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서류가 전혀 없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김무성 위원**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장관한테 특별히 지적하고 요구하고 싶은 이야기는, 261개 업체들이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6100여개 정도 되는데 이 협력업체 종업원 수는 수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상 지원되지 않는 2700억 원의 차액 중에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액이 703억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703억 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261개 입주기업들이 원부자재 협력업체들한테 이 금액을 지금 지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주들이 원해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방침으로 개성공단을 갖다가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에 의해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정부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선의의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잘했다고 보는 국민들이 다수이겠습니까마는 너무 일방적이다 하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고 특히 그중에서 가장 반대의 강도가 센 국민들은 여기에 직접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 입주기업체들인데 피해의 숫자를 빨리 줄여 주는 것이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에 대한 국론분열을 막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703억 원 정도는 정부에서 빨리 결단을 내려 가지고 줘서 6000개가 넘는 수만 명의 협력업체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편하게 해 주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주기업들과 협력업체 간에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일방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피해 지원은 개성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원부자재는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을 입주기업들이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 지원을 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그래서 자료로 입증된 부분까지 다 지원금액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와 관련된 원부자재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과 협력업체가 협의를 해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알아서 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김무성 위원** 지금 장관 말씀하는 것은 제가 만나 본 입주업체들의 주장과 너무 다릅니다. 달라서, 장관이 직접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동안 대화를 했는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는 입주기업, 비대위 분들도 만났고 현장의 비대위랑 상관없는 기업들도 만났습니다.

○**김무성 위원**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전례 없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됐을 때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불만을 줄여 주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703억 원이면 6000여 개 업체 수만 명의 종업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 일을 끝내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입주업체들과 정부와의 주장이 너무 다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피해를 줄이는 그런 일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장관의 답변과 입주업체들의 차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만나서 한번 규명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피해 지원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 자신이 비대위 분들하고도 만나서 저녁도 먹으면서 얘기를 했고요. 현장에 있는 기업 분들, 사장분들, 영업 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다 만나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의견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은 형평성에 의해서 경험업체라든지 다른 일반 해외투자업체 이런 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기업들을 최근에 만나서도 어쨌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행정적 지원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애로를 끝까지 듣고 하겠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해서 기업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를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무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장관을 도와서 함께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두 부처 기관 간부님들, 질의 시에 또 회의 진행 시에 좀 더 바른 자세를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손광주 이사장, 자세 바르게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 중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바른 자세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들께서도 저렇게 열심히 답변하고 계신데.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한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김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 저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인협회 또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강산기업인협회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소연하시는 말씀들 저는 절대로 부풀려지거나 아니면 사실 아닌 걸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크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는 더 각별히 그분들 말씀도 듣고 조금 더 친절히 의논도 해 주시고 또 최대한 도울 수 있는 것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외교부장관께 저도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들 이런저런 많은 걱정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어쨌든 충분히 여러 상황을 검토했고, 해 왔고 또 미리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일관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역으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언론의 보도라든가 중국 각계의 반응이라든가 유엔에서의 SLBM 실험에 대한 현재까지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참 우려되어서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시는데 장관께서는 최소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 외교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포함이 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드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도전들이 있고요, 또 사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점도 모두 염두에 두면서……

○**위원장 심재권** 장관님, 늘 장관님 답변 참 저로서는 유감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보도되고 있는 상황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걱정들이 장관님 말씀대로 예단하기는 적절치 않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외교부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안들로 검토되어 왔느냐라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그만하시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이전에 자료 제출 보내왔는데……

○**위원장 심재권** 예, 자료제출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일 위원** 제가 아침에 자료제출 요구했지요,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측의 책임 문제? 이것 자료 보낸 사람 누구세요? 자료 작성한 사람, 저한테 보낸 사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동북아국에서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강창일 위원** 장관 안 읽어 봤지요? 장관님 모르시면 장관님이 무식한 게 되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읽어 봤습니다.

○**강창일 위원** 고노 장관 담화에 위안부 문제 없습니까? ‘관련 내용 없음’이라고 썼네. 나 참 이런……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노 장관 담화에 어떤 식의 문구가 있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 내용 없음’이라고 자료를 보내왔어요, 이런 걸 파악 못 하면 어떻게 외교 정책을 수립하겠어요?

또 하나, ‘일본 정부가 이번 12월 28일 날 합의 문서에 공식적·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것도 자료 보내라 했는데 왜 그 자료 안 보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건 이미 다 발표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또 그것도 보내 올리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고노 장관 담화 관련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빨리 정리해서 주고 장관한테도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아베 정권에서 보낸 것도 빨리 주고, 얼마 문장이 되지 않습니까요.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외교부 움직여서 되겠어요, 자료 보내라고 했는데? 관련 내용이 없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첨부물에 있습니다마는 첨부물이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첨부물까지 포함

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위원님들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빠르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결산 관련해서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외국민 보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교류와 활동이 상당히 빈번해지면서 연간 해외 출국자가 약 20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또한 재외국민이 260만 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외교부의 상당히 중요한 중점 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외국에서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보면 현재 재외국민 보호사업 집행내역이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2015년도에 12%가 불용이 되고 있고, 특히 재외국민 보호 협력사업은 현지 경찰 부서와의 협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38%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외교부에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특히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초청한 인사들이 거의 오지 않은 상황이 생겨서 실제 예산집행을 8월 말부터 해서 상당히 저조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사업예산을 현실화하기도 하고 또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앞으로 저조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한민구 국방부장관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러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문제는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태도를 견지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 문제 또 나아가서는 외교적인 전반적인 문제까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부가 확실한 중심을 잡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에 신경전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00년의 마늘 세이프가드 전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흑자가 약 470억 불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무역 흑자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경제 문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사드 문제는 사드 문제고 중국과의 문제에서 서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엑스밴드 레이더가 한 1800km까지 레이더가 포착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중국에 있는 미사일기지와 각종 군사적인 움직임이 포착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한국이 미일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엑스밴드 레이더의 포착 범위가 중국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차 중국 측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국을 넘어가지 않는 한반도까지의 레이더 범위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한 부분은 철저히 확실한 입장을 중국 측에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드 배치는 종결시키겠다’라고 하는 식이라든지 그런 하나의 대안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케리 국무장관도 지난 2월에 그러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북핵 문제가, 미사일 위협이 해소가 된다면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영석 위원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과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파악하고 확인한 액수에 준해서라도 뭔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정부의 그런 통일정책, 안보정책에 의해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심각한 신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기업들과 함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기업과의 대화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유념해서 더 많이 접촉하고 애로사항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드 배치 발표 시점에 윤병세 외교부장관님께서 이석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석하신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장관께서 이미 엄중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공인으로서 앞으로 처신을 더 잘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한 만큼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윤병세 장관께서 막중한 외교현안에 지쳐서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링거까지 맞는 악전고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게 되면, 사퇴까지 거론하는 것은 적절분열이고 자중지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훈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사드 얘기를 좀 하겠는데……

거기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거기 조용히 하세요, 나가서 이야기하든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한 거라고 본 위원은 일찍이 생각했습니다. 참 안 했어야 될 정책을 취해가지고 술한 기업을, 124개 되는 기업을 망하게 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나마 유일한 통로 구실을 하던 개성공단마저도 폐쇄시킴으로 인해서 국가와 민족에 이르는 폐해가 이루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문제는 개성공단보다 어쩌면 더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생각을 하고 외교정책을 하는 건지, 개성공단 때도 그렇게 느꼈습시다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펍 저질러 놓고 그다음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드 배치 문제만 하더라도 이걸 도대체 국가 정책으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밀어붙여요. 생각이 있는 정부인지 정말로 의심스러워요.

우선 경제적 피해만 보더라도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안 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분명히 합니다. 절대로 합니다, 이거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제적 보복조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단할 필요없다’ 얘기하겠지요.

그건 상식입니다. 우리나라 예만 아니더라도 일본이 센카쿠열도 분쟁 났을 때 회토류로 해서 꼼짝 못하고 선장 풀어주고 그랬습니다. 기억 생생해요.

마늘 사태 났을 때 우리가 손들었지요. 필리핀 사례도 있습니다. 필리핀 바나나 통과 안 시키고 중국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노르웨이 사태도 있지요. 노벨평화상 문제 있었을 때 중국이 한 것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드 문제는 앞에 열거한 그 내용들하고 류를 달리하는 거라고 중국 정부가 보고 있을 거예요. 강도는 훨씬 더 셀 거예요. 그냥 적당히 넘

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거예요. 훨씬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감당 못 한다고 봐요. 결국 사드 배치 못 할 거예요. 못 할 거면서 이걸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이게 도대체 외교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외교장관은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감당 못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화점 간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기를 바라요. 양식 있는 장관께서 그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을 터라고는 안 보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참 다행이에요. 그 정도는 나와야지요. 이걸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폐해가 너무도 막대하고 너무도 분명한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봐야지요. 아무리 권력이 좋고 아무리 장관직이 좋다 하더라도 뻔히 눈에 보이는 폐해가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아니 그냥 모른척하고 있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비관세장벽 강화할 겁니다. 그러면 우유니 김치니 소소한 그런 것 빼고라도 화장품 등등 비관세장벽 당장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안 보세요? 관광상품 판매 중단할 겁니다. 작년에 유커가 와 가지고 14조 원 한국에서 썼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하고 달라요. 힘을 쓰면 중국인들 안 옵니다. 잘 알잖아요. 한국 관광여행사들 절단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불매운동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불매운동 들어가면 제가 아침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 기업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전경련이 제일 먼저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보수적인 전경련이 왜 반대하겠어요? 당장 불이 그쪽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드를 하느냐 말이에요.

더 큰 것은 우리 채권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중국자금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환란 옵니다. 외환위기가 옵니다. 수

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황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알고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청와대에서 여기까지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장관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 저항도 일어날 거예요. 사드 배치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그냥 있겠습니까? 그거 만만치 않을 거예요. TK가 하도 세계 나오니까 PK 지역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든 그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설명이 안 돼요. 이런 등등을 예상하면서도 어떻게 이걸 하자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국방부가, 아무리 미국이 하자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설명이 대통령께 제대로 뒀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설명이 안 됐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 왜 그때 그런 이야기 안 했느냐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이렇게 구구절절이 얘기하는 이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와대에 좀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를 강행해? 못 해요.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되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장관께서 사퇴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 이런 사실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사퇴로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사퇴하세요. 그게 진정 나라를 위하고 외교부를 위하는 길이에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양보할 거예요. 다른 방식을 찾을 거예요.

장관께서 결단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모든 측면을 다 감안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야당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단합된 자세로 정부의 결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것이 마지막까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정부로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심재권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결산과 관련해서 제가 우선 사업적인 것 한 두 개 지적하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외교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사업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이걸 뭐 작은 문제인데요. 6자 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이게 사업성과에 대해서 목표 대비 실적을 계량화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자료가 많아서 장관이 못 보셨을 텐데 제가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2013년에 북한 비핵화 협의 지원 지수 그래서 목표 90에, 실적 94 그래서 달성도 104, 마찬가지로 2014년에 북한 비핵화 진전 지수 달성도 108%, 그다음에 2015년에 북한 도발 저지 및 대응 해서 달성도 12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계량화할 때는 그런 항목에 대한 수치가 있었을 텐데 영 와 닿지 않는 리포트입니다. 못 보셨겠지만 이런 리포트가 국회에 이렇게 제출되는데 한번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6자회담과 관련된 성과 입장 반영에 다 뭐 100%를 넘는 달성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조금 보기에 민망합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지금 외교부도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에 일자리 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양이지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사업유형별, 외교부가 낸 설명자료 45페이지에 보니까 2015년도 일자리 사업 결산 내역에서 해외봉사단, 국제교류협력, 협력사업 지원 등 ODA 사업에, 3개 사업 합쳐서 약 2119억 일자리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국내용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 리포트를 다른 나라에서 안 보겠지만 우리가 명색이 해외에 지원한다는 사업에 명목은 지원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자기들 일자리 성과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역시 좀 민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을 조금 유연하게, 정말 외교스럽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알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외교 관련 민간 외교단체 지원 관계인데요. 이걸 국제교류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립니다.

요즘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각종 국제세미나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사전에 정지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국제포럼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선수가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외교부가 예산 때문에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 이런 데 너무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자료를 봤더니 물론 국내 민간단체에도 지원하고, 해외 민간단체에도 지원하고, 다자포럼에도 지원하고, 공공외교 세미나에도 지원하는데 액수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매년 느끼는 게 2013년 총액 한 50억에서 2015년 51억 4000만 원 정도, 매년 이렇게 5000만 원 정도밖에 주고 있지 않은데 지금 외교부의 영향을 보충해 주는 게 바로 그런 민간영역 차원의 공공외교 아니겠습니까?

사드의 문제점들을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민간 공공외교를 많이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국내 민간단체는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이 문제 한번 장관님 잘 검토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정양석 위원** 총 티오가 전문직 비자가 8만 5000개인데 우리가 유학생 수로 보면 중국, 인도에 이어서 한 8만 명이 유학을 가 있는데 이분들이 학교를 마치고 전문직 비자를 받는 티오가 3100개~3600개뿐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아요? 이 문제는 FTA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실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는 그간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미국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

에 특히 외국인 근로자 법안과 관련해서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 법안과 연계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어떤든 간에 저희가 계속 여러 가지 고위급회의, 특히 제가 과거에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해서 이런 계기에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또 현지에서는 주미대사관에서 상하 양원 의원들 또 보좌관들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장관님, 제가 미안한데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정양석 위원** 통일부장관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는 경험보험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본인 기업체들의 손실액과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지금 안 맞다는 부분이고 그중의 하나가 보험 가입이 저조하다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질문드렸더니, 그러니까 보험의 한도액이 70억이고 그다음에 중지되면 보험을 받는데 다시 가동되면 이것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보험이 원래 있는 건가요? 이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손실보험을 들었는데 물건을 찾으면 물건을 자기가 갖든지 돈을 돌려주든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념이고요. 그것은 일반 보험 개념이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경험보험은 다른 해외투자보험보다 훨씬 부보율도 높고 조건이 좋은 보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만 70억으로 제한해 놓은 것은 투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게 하는 정책에서 당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험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지난 2013년에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중단됐을 때 기업들이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대신 대위원을 정부한테 썼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상당 기업들은 다시 기업 가동을 해서 공장을 자기네들이 돌리면서 타갔던 보험금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반납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양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

다.

○**위원장 심재권**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입니다.

우선 사드 배치 문제 참…… 북한의 주적이 미국이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북한은 그렇게 얘기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북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강창일 위원** 사드 배치, 고고도 미사일이지요? 그게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는데 남한을 공격하려고, 한국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저고도 미사일을 이용해야지요, 북한은?

○**외교부장관 윤병세** 뭐 다양한……

○**강창일 위원** 40km 정도 미만에서, 20km 정도라고 그래요. 고고도 미사일은 높이 올라가서 저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을 이용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미국은 ‘땅만 내달라, 비용은 우리가 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미국을.

그러니까 사드는 두 가지 봐야지요. 우선 미국 공격에 대비해서, 미국이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고, 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전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중국 포위 전략 속에서 나온 것이라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안보, 국민의 생명·재산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관계로 얘기하고 있고 새로운 신냉전체제의 전개 아니냐, 꼭 19세기 말의 발칸반도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려를 하고 있지요. 참 걱정입니다, 걱정. 이런 걱정을 잘 알아주시고……

두 번째, 제가 왜 윤병세 장관의,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 이렇게 얘기하는고 하니까 국익을 최우선 과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본 문제만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 말고도 독도 문제도 있지요, 교과서 문제도 있지요, 일제강점기의 피해 배·보상 문제도 남아 있잖아요. 전부 위안부 문제로 수렴해 버렸어요. 그리고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저는 야당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정치·경제·역사 분리해서 대처하라. 야당이면서도 이렇게까지 주장했었어요. 여기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 와 계시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예.

○**강창일 위원** 제가 그때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예.

○**강창일 위원**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을 안행에서, 제가 미안한데 그때 외교순방 할 때 ‘그만 두세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지났더니 그만뒀더라고요. 제 말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예.

○**강창일 위원**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블랙홀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에요. 북한 문제도 그래요. 북핵 문제가 지금 블랙홀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개성문제, 평화통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북핵 하나로 전부 수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통일부장관이 앉아 있는데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어버렸어요. 반통일 부처로, 통일부가 아니라 반통일 부처로 비추어지고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통일부가 존재 의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북핵 문제로 전부 수렴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위안부 문제, 북핵 문제가 블랙홀이 되었다, 이것은 외교의 근본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중국은 일본하고 센카쿠열도 때문에 그렇게 싸움하다가도 또 경제협력 나서고 있잖아요, 양국 정상회담도 하고. 참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1972년도에 중국하고 일본열도에 정경분리 원칙도 세웠잖아요, 하도 과거사 배상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그러면서 신뢰, 원칙 운운하다가 이렇게 깡통외교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 여기에 우리 외교수장인 윤병세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잘 됐으면 좋았는데 잘 안 돼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북아국장인가 그런 식으로 자료 보내지 마시고, 여기 전부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말 다 아는 사람들인데 책임자 없으니까 그 자료 안 보냈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여기 12월 28일 날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할 때 한국 측 입장 표명에서, 소녀상 문제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주장도.

한국 측 표명입니다. ‘소녀상에 대해 공공의 안녕,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본에서는 소녀상 철거하라, 아마 지금 재단 만들었잖아요. 소녀상 철거가 없으면 이거 제대로 못 갑니다. 소녀상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팡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팡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일본 사람들의 언어 씹씹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이미 무효임’을 ‘이미’의 시점 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였잖아요. 국교 정상화 할 때 한일회담 뭐가 어찌고저찌고 한 것. 이렇게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관방장관이더라도 소녀상 철거 전제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재단 팡입니다, 팡. 일본만 욕할 게 아니예요. 이런 데 합의해 준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참 심히 걱정됩니다. 과연 7월에 재단 설립해서 일본이 100억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이것도 걱정이고, 어떤 식으로 이게 같지 이것도 걱정이고…… 참고로 잘 들어주십시오, 예? 장관님, 참고로 잘 들으시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강창일 위원 하세요, 얘기 있으면. 할 얘기 많이 있겠지만 간단히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위안부 합의는 과거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소위 ‘사사에 안’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합의이고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과거의 우리 정부에서 ‘그 정

도면 됐겠다’ 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이 저희가 얻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녀상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 측 스스로도 이것을 연계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예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것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더욱더 돌아가시기 전에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와 야당과 또 저희 정부 포함해서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창일 위원 예, 진행되는 것 좀 두고 봅시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결론이 날……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대일 전략은 역사 문제와 호혜적인 문제를 구분한다, 역사 문제와 북핵 문제와 같은 중요한 안보 문제는 분리한다라는 대전제 위에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저희가 유지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창일 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런데 저희도 그런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

○위원장 심재권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드 배치의 결정이 결국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 균형외교를 무너뜨리고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체제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아직까지 가지고 왔던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전략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의 삼각동맹이 동북아시아에서 부딪히면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그래서 군비확충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으로 미사일을 전진 배치시키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북한 미사일만을 걱정했다가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까지를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사드 배치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안보에 있어서도 이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외교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동안에 한중 관계, 한러 관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또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북한의 북핵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침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대남 경제제재 형태로 돌아설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 국익에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치 결정 과정을 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5일 날 사드 배치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바로 청와대에서 NSC가 사드 배치를 긴급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틀 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이에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의 프랭크 로즈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만난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의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홈페이지에 '7월 1일부터

5일까지 로즈 차관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전략적 문제의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서 외교부와 청와대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일정에는 청와대를 만난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뜻이나 하면 다시 말해서 로즈 차관보의 방한이 그리고 3박 4일 동안에 사드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하는 데 저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틀 동안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외교부장관께서는 '여러 가지로 대책을 다 강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이후에 우리 한국에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비관세 장벽들을 이용해서 보복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한국 기업의 공장 부지 인허가 문제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을 하거나 자국민 보호를 이유를 해서 위생이나 안전 규제를 강화시켜 나간다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항의할 수 있는 방법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지금 이미 사드 배치가 발표되는 날 3조 2000억 원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의 3조 2000억 원이 증발했지만 이후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지금 아직까지 대책 질의를 해도 전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말씀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토지수용비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우리가 일단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비와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김경협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드 비용

은 미국에서 해서 그냥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1991년에 체결됐던 특별조치협정이 있습니다, SMA. 주한미군 주둔비는 절반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결국 이 문제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SMA에 의해서, 특별조치협정에 의해서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을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땅도 줘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도, 주한미군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땅도 제공하고 돈을 제공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미 관련된 한미 당국 간의 상호방위조약하의 관련 협의 절차에 따라 이번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님께서 이번 사드 배치로 인해 북핵 등등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득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적에 남북 관계에서 저희가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사드 배치를 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높아질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무력시위나 도발을 일으킬 개연성도 훨씬 높아질 텐데 굳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잃는 게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건지?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가 북한의 도발 또 앞으로 있을 더 큰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도 항상 튼튼한 안보, 확고한 역지력으로 평화를 지키고 동시에 평화를 또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북한의 도발을 막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사드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런 튼튼한 안보는 앞으로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규 위원** 그것은 다른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 지금 남북 관계가 최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될 소지도 없다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은.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남북 관계의 발전이 굉장히 어렵고 과거에도 남북 관계가 잘 발전하다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이런 도발로 다시 후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도발을 못 하게 또 오판을 못 하게 하고 위협을 못 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태규 위원** 어쨌든 사드 배치로 인해서 동북아 정세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걱정을 하고 계시는, 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의례적이고 좀 관성적인 답변 아니면 무성의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북핵 문제로 인해서 대북한,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이고 또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그런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저는 통일부만큼은 그래도 북한 당국과 대화의 끈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주문을 하는 국민 여론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북한 황강댐의 기습적인 방류 문제 때문에 사실 며칠 동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임진강의 인근 주민들은 사실 또 재산상의, 생명상의 위협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고 이 부분이 언론에 크게 이슈로 며칠 동안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기습 방류하지 말고 방류할 적에 우리 쪽에 알려 달라고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최근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고요, 다만 작년에 이러한 물 관리를 위해서……

○**이태규 위원** 아니, 그냥 이번 것만 제가 여쭙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이번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며칠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데 통일부가, 이 부분은 북핵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이것은 정말 민생의 문제고 인도적인 측면인데 이런 부분조차도 통일부가 손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이런 부분에서 협조 좀 해 달라, 이런 정도의 조치도 안 한다면 통일부로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게 아니고요……

○**이태규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6월 27일 날 통일부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이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의례적이고 무슨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고 민생의 문제고 삶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북핵과 상관없이 최소한 북한 당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한테 알려 줘야 되고 또 ‘기습 방류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 요청, 이것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통일부가 안 한 단 말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까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대화의 끈, 작년에 저희 정부에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하고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끈을 끊어 버린 것이, 모든 통신을 닫아 버린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작년에 물 관리 같이 하자고 요청했지만 북한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최근에 전혀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북한한테 그런 기대를,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위협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이 고조가 된 것이지 한국 정부가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태규 위원** 긴장에 있어서 국방부나, 외교부도 굉장히 강성 입장이고요. 저는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통일부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태규 위원** 만약에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 정부가 필요하면 어디다가 요청을 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그러니까 대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대화, 제대로 된 교류 협력을 위해서 북한의 썬법을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북한한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당장 댐이, 만약에 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북핵과 연관시켜 가지고 정부의 일관된 기조 속에서 황강댐 문제를 가둬 놓는다면 그것은 너무 유연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 지금 황강댐의 그런 통보 문제는 사실은 핵실험이나 최근의 이것과 상관없이 최근 몇 년 간, 앞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9년에 협의가 있고 한두 번, 세 번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북한이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하자는 것도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자원공사나 군 등과 같이 협력을 해서 군남댐을 다 비워 두고 비상연락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 놓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시도를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국민들의 그런 희생을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취할 조치를 최대한 취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북한……

○**이태규 위원** 장관님, 요청을 하신 적이 없는데 여러 차례 협력을 가했다는 것은 뭐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올해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우리가 요청도 했고 저도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전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규 위원** 대화라는 것은 대답이 없어도 끝까지 저희가, 인도적인 측면 이런 것은 저희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런 것은 통일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할까 그러다가 추가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는데요, 지금 시중에……

외교부장관님, 시중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사드에 대해 얘기한 것들 알고 계시지요?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기사를 말씀하시는지……

○**홍문종 위원** 오차 범위가 20배나 많고 어찌고 하면서 사드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드를 설치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대북용이 아니고 대륙 간이고 어찌고 하는 얘기들 한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기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공동실무단의 검토 결과를 포함해서 미군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 끝에 이번에 저희가……

○**홍문종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홍문종 위원** 전자파 문제는 어떻습니까? 5.5 km 이내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자파 문제는 아마 국방부장관께서 여러 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차단된 100m 이내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 내에서도 500m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자파 문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홍문종 위원** 그리고 아마 국방위원회에서 한 민구 장관이 위치가 거의 결정돼 있는 걸로 얘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국방부장관께서 아마……

○**홍문종 위원** 이게 꼭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전자파 문제나 오차범위 문제나 지역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언론상에도 그렇고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막 횡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문제들 가지고 야당에서는 민란 운운해 가면서 국론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인상도 느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드에 관해서 이리이리 이런 잘못된 얘기들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다라고 일목요연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방부에서도 벌써 그런 설명자료가 나와 있고요.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부지를 발표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욱더 상세하고 포괄적인 설명들을 할 겁니다.

○**홍문종 위원** 글썽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위치가 어디가 되건 위치가 설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국론분열을 일으킨다든지 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대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외교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라 그럴까요? 국민들이 어차피 우리가 하기로 한 거고 주변 국가들이 이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하고 있지만 지금 물러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주변 국가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을 비롯해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민심도 끌어당겨야 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에 관해서 장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외교부는 외교안보부서의 일원으로서 이 모든 협의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홍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권**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위원장 심재권** 예, 말씀하시지요.

○**이태규 위원** 금방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님께서 사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중에 나도는 우려들을 말씀하시면서 발언 중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그다음에 ‘야당에서 국론분열을 일으키려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드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와 또 국민적 공감대,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 내기 위한 야당의 고민, 걱정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대변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야당에서 국론분열을 일으키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적절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문종 위원** 말씀하셨으니까요.

○**위원장 심재권** 홍 위원님.

○**홍문종 위원** 동료 위원이 발언한 데 대해서,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야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의견에 관해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론분열이 일어나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기서 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어떤 지역이 어떻게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한 건데 그 얘기에 관해서 제가 누구를,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관해서 이름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예.

○**이태규 위원** 지금 존경하는 홍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야당 위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어도 정부의 입장이 100% 옳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문종 위원** 아니, 반대입장이라고 할지라도 민란을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태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홍문종 위원** 아니, 이것 반대하는 것하고 민란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위원장 심재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야당이 국론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된다는 건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 심재권** 홍문종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아니, 민란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에 관해서 얘기한 건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이태규 위원** 그러면 그 민란 운운에 대해서……

○**홍문종 위원** 이태규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 심재권** 정돈해 주십시오.

○**이태규 위원** 아니요, 민란 운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마는 어쨌든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위원이라든가 또는 야당이라든가 여당이라든가 이렇게 지칭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견 자체로서 함께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외교부장관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예산 문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계획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또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지막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원혜영 위원** 그 보고서가 나와 봐야 구체적인 배치 일정 같은 게 나오겠네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체적으로 그런 것과 연결되는 사안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무래도 국방부에서, 군

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혜영 위원 미국 정부의 예산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미국방수권법안에 한국 사드 배치 부분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한미 상호 방위분담금 내에서 미국이 비용 처리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이 예정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보통 1년 전에 앞으로 5년 단위로 끊어서 협상을 합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면 사드 비용으로 인한 증액이 예상되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나 준비는 아직 본격적으로 된 바가 없겠네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여기에 연결 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혜영 위원 국방부장관은 ‘한미 상호 방위분담금 내에서, 그걸 가지고 미국이 비용 처리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없다는 장관 말씀은 무슨 얘기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말씀은 저희가 지금 현재 부담하는 것은 토지와 부대시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분담금 내에서 미국이 처리할 거라 그랬으니까 미국에서는 한미 상호 방위분담금을 늘리자, 사드 배치하는 데 비용이 드니까, 이런 논리가 당연히 나올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비나 검토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 이것을 그 문제와 어떻게 연결시킨다 아니다 이런 식의 미 측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그런 맥락에서 미리 앞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혜영 위원 미리 앞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국방부장관도 그렇게 했고 당연히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검토라든가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앞으로 미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파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서 협의를 해가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혜영 위원 통일부장관께 8·15 관련해서, 북한이 영문 국호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5 광복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광복절을 기해서 북한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게 뭐가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시간을 바꿨습니다.

○원혜영 위원 8·15부터 표준시를 30분 늦게, 그러니까 서울 표준시보다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사용한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결국 북한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는 시간대가 다른……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30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상태에서 살고 있지요.

이런 남북 간에 시간을 달리하는 정책을 북한이 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남북 간에 이질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만 더 크게 봐서 북한이 2개의 코리아정책을 본격화하는 상징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북한이 표준시간을 바꿨을 때도 그것이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저희가 우려했고 그런 점들을 공식적으로 정부의 입장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북한의 행동들, 특히 말하자면 민족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민족은 김일성, 김정은 민족주의식으로 해석을 하고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일과 동질성 회복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 행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빨리 이런 동질성 회복과 또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 위원 지난 9월에 북한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 때문에 코리아의 알파벳 표기의 첫 글자가 원래는 ‘C’였는데 ‘K’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측으로는 5월 6일 날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 영문명을 수정할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파악이 안 됐는지 그것은 지금 불확실한 상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작

년에 사실은 북한이 시간을 바꿨을 때 그다음 단계가 국호의 알파벳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접쳐지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북 측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도 없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7차 당대회에서 이런 것이 수정·변경되거나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은……

○통일부장관 홍용표 전혀 없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정도면 북한이 작년에 표준시간 바꾼 것처럼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전혀 발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없습니다.

○원혜영 위원 공표하는 것은 이를테면 일련의 8·15 이벤트로 작년에 평양 표준시를 정했으니까 ‘K’를 ‘C’로 바꾸는 걸 올 광복절 때 할 수도 있겠네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썽, 그것은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혜영 위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남북관계의 규정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 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고민이 있어야겠다, 이런 것을 현재 대치 국면 속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더, 이질화되는 정책적인 흐름의 기조를 바꾸는 것에 대한 검토나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자꾸 자신들의 독자적인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또 군사적인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이런 모든 사항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평화통일과는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노력을 하고 또 통일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계속해서 사드 관련 문제, 질의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질의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요.

결산 관련해서, 외교부 2015년도 해외원조사업 ODA에 편성된 전략사업비 250억 원이 있는데 이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외교부의 운영비, 직원 차량 수리비, 직원 복리후생비, 해외공관 운영비 이렇게 해서 78억 원을 사용했어요.

‘기재부에다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부족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지 이렇게 ODA 전략사업비를 전용할 문제는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ODA 집행액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장관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전략사업비를 아프리카 지원 예산 속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의 사업 프로그램으로 설정해서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략사업비 운용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200억 원 이상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관련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까지 ODA 집행액을 0.2%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이것은 그래도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께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개성공단 피해보상 관련해서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피해신고 금액이 9446억 원인데 정부에서 확인한 금액이 7779억, 여기에 대한 지원금액이 5079억 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상당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고, 여기에서의 문제는 아마 이것을 지원하는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이 정리가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몇 개의 기업들, 피해가 큰 기업들은 약 30~40%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가 작은 기업은 70%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2월 달에 대통령께서 아마 90% 이상 투자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입주업체와 협력업체들 간에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력업체들의 그게 주로 부자재 비용 이런 비용들인데 이런 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 법적인 소송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협력업체가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을 못 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협력업체까지 부도 위기에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추경 대상에 혹시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피해지원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900억 가량 통과시켜서 아마 그것이 피해지원에 활용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피해지원액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업들이 빨리…… 저희 정부로서는 소송 문제나 이런 것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피해지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빨리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지원금을 받아 간다면 이런 소송 문제들도 많이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협 위원 기업들이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출하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투자금액의 90% 지원은 확실하게 하실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대통령께서 그 당시 국회에서 연설하실 때 말씀하신 90%는 경협보험금의 지급률 90%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때 90%를 말씀하신 것과 함께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유동자산 즉 원부자재 등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교역보험에 지원해서 또 지원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번 피해지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90%를 지원한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도 있고

그 외에 70%를 지원한다 이런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협력업체들은 입주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아니, 그만큼의 보상을 다 받았는데 왜 돈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업마다 워낙 차이가 커서 지금 협력업체들과 입주업체들 간에 굉장히 큰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경협보험이라는 것은 투자자산의 90%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자산 부분은 교역보험에 지원해서 70%를 지원했고요. 지금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어쨌든 7%에 22억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규모가 큰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투자한 것보다 덜 받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받은 기업들도 있고요. 다만 좀 더 영세한 기업일수록 받는 비율은 더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협력업체하고 입주기업체와의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지원들을 받아 가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 처리를 한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고 저희도 지금 관련 사항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가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략사업비를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로부터 분리해서 편성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로서는 재정당국하고 그러한 전략사업비를 기존의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로부터 분리해서 편성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해 보겠는데 다만 그동안에 전략사업비가 정상외교 지원이라든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무상원조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운용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지원 대상 국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상 아프리카 지역의 비중점 국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에도 매 사업마다 재정당국의 사업계획심사를 거쳐 가지고 수시배정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집행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러한 전략사업비에서 재외공관 운영 경비 등 다른 예산으로 이용한 조치 관련해서는

사실 15년에 이례적으로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해 가지고 주요 실·국 사업 수행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예산을 이용했습니다. 다마는 내년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가능한 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시간상 일단 일괄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를 보면 매년 항상 계획과 실제 집행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평균 100%를 넘고 2011년의 경우에는 216.9%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원수의 해외순방에 있어 가지고 필요하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법이 많은 법체계가 불안정한 법체계가듯이 만성적인 예비비 편성은 정상적인 예산구조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상외교라는 것이 중요한 국가전략의 한 부분일 텐데, 사전에 충분하고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정상외교 전략과 일정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처럼 매년 실제 집행과 계획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해외순방계획은 누가, 어떤 목표와 근거를 가지고 수립하는지 또 계획과 실제 집행에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정상외교 전략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산의 아세안문화원 설립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건축과는 관계가 없는 동남아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배정 및 공사비의 과도한 변경을 초래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잘못된 설계라는 것은 설계변경을 가져오고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공사비의 증액을 가져오고 그 뒤에는 항상 무엇인가 부정직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여 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조치다, 특히 동남아연구소의 인적 구성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동남아연구소가 아세안문화원 추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외교부가 이를 근거로 예산계획을 수립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이태규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의 2015년 실제 불용액 214억 6900만 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 예산 등은 145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원인인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 정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연도별 추세를 보면, 또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이탈주민의 70.4%를 지금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탈주민에 여성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북한정세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해 40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이 중에서 35억 8900만 원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준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보면 통일준비위원회의 목적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준비위원회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잠깐만요. 가만히 보면 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라는 부분을 민주평통자문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평통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교부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외교부 관련되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의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로서는 정상 및 총리 외교사업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정규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만 정상외교의 구체 일정이라든가 그 규모의 사전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태규 위원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대개 정상외교를 초기에 저희가 입안할 때 여러 가지 행사의 범위라든가 행사의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주재국 정부와, 해당되는 방문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가 사후적으로 행사가 늘어나고 또 범위도 넓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당초보다 좀 늘어나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한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연구소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동남아문화원의 비전, 또 지금은 아세안문화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비전과 역할을 제안한 동남아연구소를 저희가 정책연구 용역기관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세안문화원의 당초 건립규모 그다음에…… 이후에 아세안문화원 건립자문위원들이 보다 나은 의견들을 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규모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건립규모와 관련된 약간의 변경이 있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규 위원 아니, 이것은 웬만한 정부기관이나 부처들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제가 이해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은 왜 건축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단체에다가 그런 용역보고서를 맡겼는지, 이것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저희 해당되는 지

역국에서 담당했던 사안입니다마는 그러한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보다 더 전문적인 인사까지 포함이 된 추진체계를……

○이태규 위원 장관님, 외교부는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자존심도 강하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업무처리를 이렇게 상식 이하, 보통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를 한 경위를 조금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외교부에서 있을 수 있는 건지. 이게 만약에 정말 잘 아직 정비되지 않은 어떤 초기 단계나 이런 데서 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외교부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져 답변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질문하신 탈북민 관련 사항에서 일단 탈북민 입국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이 대부분 제3국을 거쳐서 입국을 하고 제3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북한의 정세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008년, 2009년까지 굉장히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 줄어들기 시작하고 특히 2014년부터 1300명대로 떨어지면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아주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일단 최근에 많이 줄어든 것은 북한이 최근 특히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국경의 경비를 굉장히 강화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체류하다가 입국한 숫자들이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라는 측면도 하나의 해석요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2008년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원수가 2008년~10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 5년간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5년 동안의 보호기간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엔 예산 불용액이 좀 더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

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기회를 주시면, 아까 통준위하고 민주평통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관여했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처음 만들 때부터, 민주평통은 원래 헌법기관으로 한 2만 여명의 자문위원들을 거느리는 하나의 풀뿌리 조직이고 통일준비위원회는 한 50여명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민간의 아이디어·전문성과 정부의 정보를 합쳐서 협업을 통해서 통일 준비를 하고 그것을 통일부가 정책으로 입안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이 라는 화두는 같지만 서로 하는 영역은 좀 구분이 돼 있다는 점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통일부장관께서 설명드린 대로 통일준비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통일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심의를 하는 기관이라면 저희 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각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는 약 2만 여명의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또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를 국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일견 볼 때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면에서 유사한 점은 있지만 그 구성이나 활동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심재권**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 사드배치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외교부의 명쾌한 해답이나 이런 걸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 외교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외교부에 맡겨 놓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이든 아니면 국방위원회하고 연석회의를 하든지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해당국, 관련국들 각국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간담회, 형식은 어떤 것으로 해도…… 어떤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어떻게 갖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등 최근 정책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의 의견청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외교부 차원에서는 사실 보안상의 문제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하더라도 사실 이런 게 한번쯤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권** 3당 간사님들께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등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석현 위원, 문희상 위원, 추혜선 위원, 박주선 위원, 김도읍 위원, 원혜영 위원, 강창일 위원, 정양석 위원, 김경협 위원, 이태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법안 및 비준동의안 등 19건의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심층적인 심사를 하셔서 시정요구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여러 문제점과 함께, 저의 의견으로서 한번

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드배치 결정 재고를 포함하여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병세 장관, 홍용표 장관, 사무처장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장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7월 1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 (6인)	김도읍 윤영석 정양석	새누리당(3)
	◎김경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2)
	이태규	국민의당(1)
예산결산 기금심사 (6인)	◎윤영석 원유철 이주영	새누리당(3)
	강창일 김경협 박병석	더불어민주당(3)
청원심사 (6인)	김무성 서청원	새누리당(2)
	문희상 원혜영 이석현	더불어민주당(3)
	◎이태규	국민의당(1)
공공외교 강화 (7인)	◎윤상현 최경환 홍문종	새누리당(3)
	설 훈 원혜영	더불어민주당(2)
	박주선	국민의당(1)
	추혜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7인)

강 창 일 김 경 협 김 도 읍 김 무 성
문 희 상 박 주 선 설 훈 심 재 권
원 유 철 원 혜 영 윤 상 현 윤 영 석
이 석 현 이 태 규 정 양 석 추 혜 선
홍 문 종

○청가 위원(1인)

박 병 석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중 후
전 문 위 원 배 용 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 관 윤 병 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 흥 균
기획조정실장 백 지 아
다자외교조정관 최 종 문
경제외교조정관 이 태 호
감 사 관 이 상 옥
원자력기획신외교기획관 함 상 옥
동북아시아국장 정 병 원
남아시아태평양국장 강 영 훈
북 미 국 장 여 승 배
유 럽 국 장 박 철 민
아프리카중동국장 권 희 석
개발협력국장 이 용 수
국제법률국장 박 철 주
문화외교국장 최 영 삼
재외동포영사국장 김 완 중
국제경제국장 김 영 준
양자경제외교국장 천 준 호
평화외교기획단장 김 용 현
한국국제협력단 이 사 장 김 인 식
상 임 이 사 김 인 식
한국국제교류재단 이 사 장 이 시 형
경 영 이 사 김 광 근
교 류 이 사 윤 금 진
재외동포재단 이 사 장 주 철 기
기 획 이 사 최 동 준
사 업 이 사 김 영 근
통일부
장 관 홍 용 표
차 관 김 형 석
대 변 인 정 준 희
기획조정실장 최 보 선
통일정책실장 천 해 성
정세분석국장 임 병 철
교류협력국장 김 남 중
남북협력지구 이 상 민
발전기획단장 이 무 일
남북회담본부장직무대리 이 금 순
통일교육원장 이 기 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 한 정 옥
남북출입사무소장 이 정 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 무 처 장	권 태 오
기 획 조 정 관	김 안 나
통일정책자문국장	김 점 준
위원활동지원국장	전 난 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 사 장	손 광 주
상 근 이 사	박 중 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교역지원실장	남 근 우
----------------------	-------

○의안 회부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 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이상 5건 2016. 6. 28. 정부 제출)

이상 5건 6월 29일 회부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6. 7. 1. 이학재·이현승·정종섭·안규백·박완수·이우현·임종성·김현아·윤영일·주승용·전현희·김도읍·정동영·김명연·서형수·김재경·정성호·이찬열·함진규·정태옥·주호영·민홍철·김무성·김관영·유승민·김세연·유기준·하태경·원유철 의원 발의)

7월 4일 회부됨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

(2016. 7. 6. 정동영·서형수·박남춘·김중로·김부겸·강창일·김경협·최경환(국)·김중희·김삼화·정성호·김동철·윤관석·이태규·김경진·김광수·이동섭·최도자·송기석·이용주·박주민·박주현·박정·윤영일·신용현·김현권·손금주·윤소하·심상정·이정미·정인화·김병욱·황주홍·김성식·주승용·박주선·박지원·장병완·유성엽·김관영·천정배 의원 발의)

7월 7일 회부됨